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김 선 배 연 구 위 원
정 윤 선 부 연 구 위 원

KIET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심층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 김 선 배 연구위원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OECD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발전 및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농 파트너십 활성화와 우리나라 농촌 지역 발전 및 농촌 산업 육성을 대표하는 6차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전략 및 주요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자원의 활용과 부문 간의 연계 및 융합을 강조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RIS 3) 전략이 부각됨.
- 농촌 지역 및 농촌 산업 발전전략으로는 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Rural - Urban Partnership)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 관점에서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 해당함.

○ 본 연구는 산업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와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보다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음.

- 도·농 파트너십의 이론적 배경, 정책 이슈 도출,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함.
- 이를 통해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2.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및 정책 이슈

○ 도·농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상호 윈(win)윈(win) 발전 전략에 해당함.
- 인구(인적자본, 통근), 경제발전(투자와 경제적 거래), 공공 서비스 공급, 환경재와 어메니티, 상호작용 촉진(거버넌스) 등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다양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함.

○ 도·농 파트너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성공 요인이 요구됨.
- 성공 요인으로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연계, 공유된 문제의식, 기능적 동질성, 전략과 목표의 공유, 특정 형태의 거버넌스, 협력의 경험 및 전통, 장기적 노력 등이 필요함.

○ 도·농의 파트너십은 산업 및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반영하고 있는 농촌 산업 및 농촌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곧 농촌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도시 지역의 혁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연계 협력 촉진 전략임.

○ 이상의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및 스마트 전문화 전략, 농촌·도시의 기능적 연계, 도·농 파트너십의 성공 요인을 고려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은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 활용(연계 협력 강화),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규모

의 경제 창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의 3대 정책 프레임워크로 설정함.

○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 활용 차원에서는 도시·농촌 지역 간의 부존자원의 상호의존성, 즉, 시장 및 혁신 역량차원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전략과 관련된 4대 정책 이슈를 발굴함.

- 이슈 1: 농촌과 도시 지역과의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인력교류 및 양성 연계
- 이슈 4: 농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 차원에서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다양한 기능적 연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의 임계 규모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창출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도출함.

-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이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산업 육성의 적정 공단 단위 및 육성 전략 등과 관련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함.

3. 6차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및 정책구조 평가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의 활성화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농촌 산업 육성 정책임.

○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추진 주체에 따라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역 등으로 다양하고 영세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지원하는 매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음.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촌 산업 육성 및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영세한 다수의 지원 대상에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시켜야 하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지원 대상도 영세하고 다양하고 그 수가 많으며, 지원 프로그램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임.

○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 구조 평가에서도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정책적 필요성 및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 간의 정합성은 양호하지만 사업의 성과 제고 등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김선배·송우경 외, 2014).

○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도·농 파트너십의 5대 이슈별 정책과제

▌이슈 1: 농촌과 도시 지역과의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형성에 노력해 왔으나, 향후에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시장 개척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형성 및 창출을 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6차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통합브랜드 구축,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숍 확대, 판로 다양화 지원(현대백화점 명인명촌, 코레일과 협력 프로그램, SNS마케팅, 명절시의 패키지상품 등) 등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도의 농정당국, 도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차산업활성화센터 등의 실질적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국 단위의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 및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 재능기부 프로그램, 기업의 1촌 지원 프로그램 촉진 등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인력교류 및 양성 연계

○ 도 단위에서 교육, 창업보육, 인재 매칭 등의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교류 및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6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귀농·귀촌자의 활용,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Family Doctor 제도를 차용한 코칭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등

▌이슈 4: 농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농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계열화, 조직화 등을 통해 마케팅파워 제고, 연합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통합 브랜드 개발, 6차산업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 등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지역별 특산품 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6차산업 주체로서 농업경영체, 농촌주민을 동원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역 생산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측면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목표 공유(공동 학습 지원), 자원의 공동 이용체계 구축 지원, 지역축제의 순환 개최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계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5.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과 6차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을 토대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도·농 파트너십은 도시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역량의 상호

보완성 활용과 농촌 산업 육성의 임계 규모 확보를 강조하는 전략이므로 도·농 파트너십의 5대 정책 이슈별로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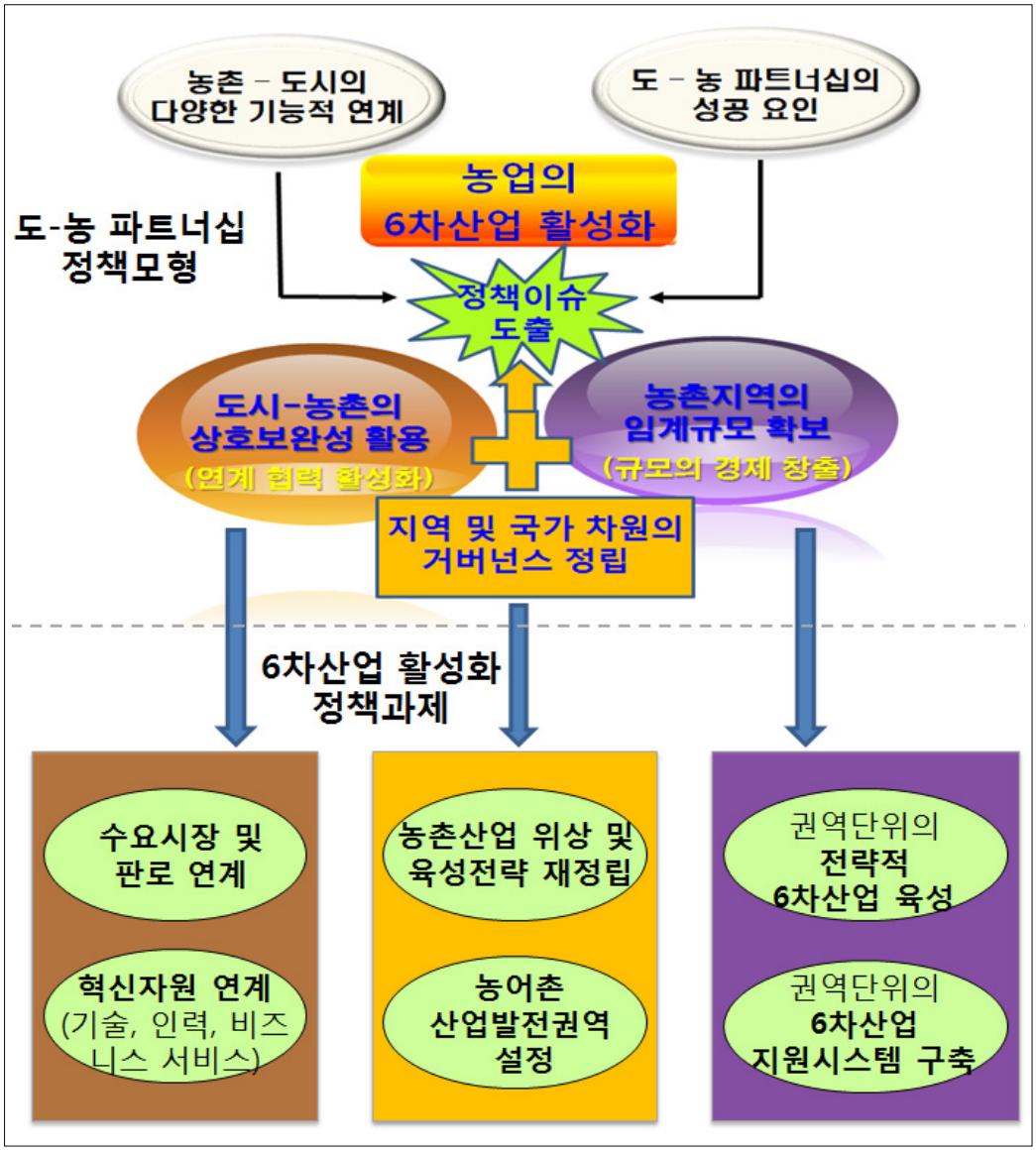
○ 이와 함께 도·농 파트너십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촌 산업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소위 '농촌 산업 발전권' 설정을 통해 농촌 산업 육성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개별 품목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아래 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에서 소위 '전략적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소위 '전략적 6차산업' 시범 사업은 '농촌 산업 발전권' 내에서 지역별로 기존 특화된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융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함.

○ 그리고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에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것은 6차산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구조적 복잡성을 해소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를 위함임.

그림 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과 정책과제 요약



자료: 저자 작성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 3

제2장 도·농 파트너십의 이론적 동향: 정책모형 및 정책 이슈

1.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스마트 전문화 전략 ····· 5
2.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성공 요인 ····· 11
3. 도·농 파트너십의 정책모형 및 정책 이슈 ····· 22

제3장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1.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정책 목표 ····· 27
2. 6차산업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경험 ····· 29
3. 중앙정부(농림축산부)의 6차산업 육성 방안 ····· 38
4. 6차산업의 유형 및 참여 현황 ····· 43

제4장 도·농 파트너십 이슈별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사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1. 이슈 1: 도시 지역과 연계한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55
2.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66
3.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인력 교류 및 양성 연계 ····· 76
4. 이슈 4: 농촌과 도시 지역과의 혁신자원(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79
5.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84

제5장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과 6차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1. 6차산업 활성화 정책구조 평가 ····· 89
2. 도·농 파트너십의 5대 이슈별 정책과제 요약 ····· 92
3.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및 정책과제 ····· 95

참고문헌 ····· 105

표 차례

제3장

표 3- 1.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비교 ····· 37
표 3- 2. 주도산업에 따른 유형 및 사례 ····· 43
표 3- 3.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및 사례 ····· 44
표 3- 4. 창업 목적에 따른 유형별 특징 ····· 46
표 3- 5. 주도산업에 따른 6차산업화 유형별 현황 ····· 47

제4장

표 4- 1. 6차산업 우수상품 안테나숍 입점업체(31업체) ····· 56
표 4- 2. 충청북도 6차산업화 현장 코칭 개요 ····· 82

제5장

표 5- 1.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6차산업화 정책평가 ····· 9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 7
그림 2- 2. 기능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 ····· 13
그림 2- 3. 도시·농촌 파트너십의 프로세스와 동태적 변화 ····· 15
그림 2- 4. 도·농 파트너십의 일반적 성공 요인 ····· 17
그림 2- 5.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 23

제4장

그림 4- 1.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 모습 ····· 58
그림 4- 2. 보은 대추축제 모습 ····· 59
그림 4- 3. 충청북도 기타 축제 모습 ····· 59
그림 4- 4. 괴산유기농엑스포 개요 ····· 62
그림 4- 5. 포도연구소 출원 포도 품종 ····· 69
그림 4- 6. 충북 영동 와인연구소 ····· 70
그림 4- 7.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산·학·연 현황 ····· 71
그림 4- 8. 한방약초 산업의 6차산업화 모델 ····· 72
그림 4- 9. 충북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인증서 전달식 ····· 81
그림 4-10. 와인인삼트레인 모습 ····· 85
그림 4-11. 와인창고 견학 ····· 85
그림 4-12. 금산인삼관 견학 ····· 85

제5장

그림 5- 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과 정책과제 요약 ····· 96
그림 5- 2. 농어촌 산업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98
그림 5- 3. 농어촌 산업 육성 모델 ····· 100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OECD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산업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방형 산업정책(matching winners)과 장소 중심의 지역정책(place based regional policy)이 부각되고 있음.

○ 개방형 산업정책은 산업 부문 간의 연계 협력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있음.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육성 전략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자원의 활용과 부문 간의 연계 및 융합을 강조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RIS 3) 전략이 부각됨.
- 농촌 지역 및 농촌 산업 발전전략으로는 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Rural - Urban Partnership)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 관점에서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 해당함.

○ 우리나라는 산업 및 지역발전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2000년대 이후 ICT, BT, NT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광역경제권 정책 등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해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행복생활권과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촌 지역 발전 및 농촌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6차산업화를 통해 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 따라서 OECD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발전 및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농 파트너십 활성화와 우리나라 농촌 지역 발전 및 농촌 산업 육성을 대표하는 6차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전략 및 주요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큼.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산업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와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보다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도·농 파트너십의 이론적 배경, 정책 이슈,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도·농파트너십의 이론적 동향: 정책모형과 정책 이슈

○ 산업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육성 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와 도·농 파트너십의 특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공 요인을 살펴봄.

○ 도·농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농촌 산업(6차산업 활성화)의 효율적 육성 방안과 연관된 정책모형과 5대 정책 이슈를 도출함.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 봄.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사업 유형 및 지원 대상 등 전반적인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도·농 파트너십 이슈별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사례(충북도 사례)

○ 앞서 도출한 6차산업의 도·농 파트너십 5대 정책 이슈별로 지역 차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모색함.

- 5대 정책 이슈별 지역 추진 사례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함.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과 정책과제 제언

○ 마지막으로 도·농 파트너십 5대 정책 이슈별로 제시된 6차산업 정책과제를 요약하고 이를 반영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함.

제 2 장

도·농 파트너십의 이론적 동향: 정책모형 및 정책 이슈

1.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스마트 전문화 전략

1.1. 산업 및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1)]

▌수직/수평적 산업정책에서 개방형 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수직적인 산업정책은 국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선별하고(picking winners) 각종 지원들을 집중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으로서 후방 연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산업연구원 2014).

-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자유화와 더불어 R&D, 인력, 규제 완화 등 외부효과가 큰 생산요소에 대해 보조금과 정부지원을 추진함.

---

1 본 절은 최윤기·김선배 외 (2014)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요약 정리함.

○ 소위 기능적인 또는 수평적인 산업정책 패러다임(backing winners)은 주로 IT, BT, NT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인프라 즉, 금융시장과 규제환경 개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해당됨.

○ 개방형 산업정책(matching winners)은 혁신 환경 및 산업생태계 조성의 토대 위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부문 간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략임.
  - 이는 공간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이 아닌 중범위 공간 단위의 산업발전 전략으로 적합함을 의미

▌공간무차별 지역정책에서 장소 중심의 지역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World Bank의 공간무차별 지역정책은 지역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3-D-I 지역발전안을 제시함.
  - 3-D: 밀도(Density), 거리(Distance), 분업(Division)
  - 3-I: 제도(Institution), 인프라(Infrastructure), 인센티브(Incentive)

○ OECD의 장소 중심 지역정책(place based regional policy)은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정 지역 단위의 혁신환경 조성 혹은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선진국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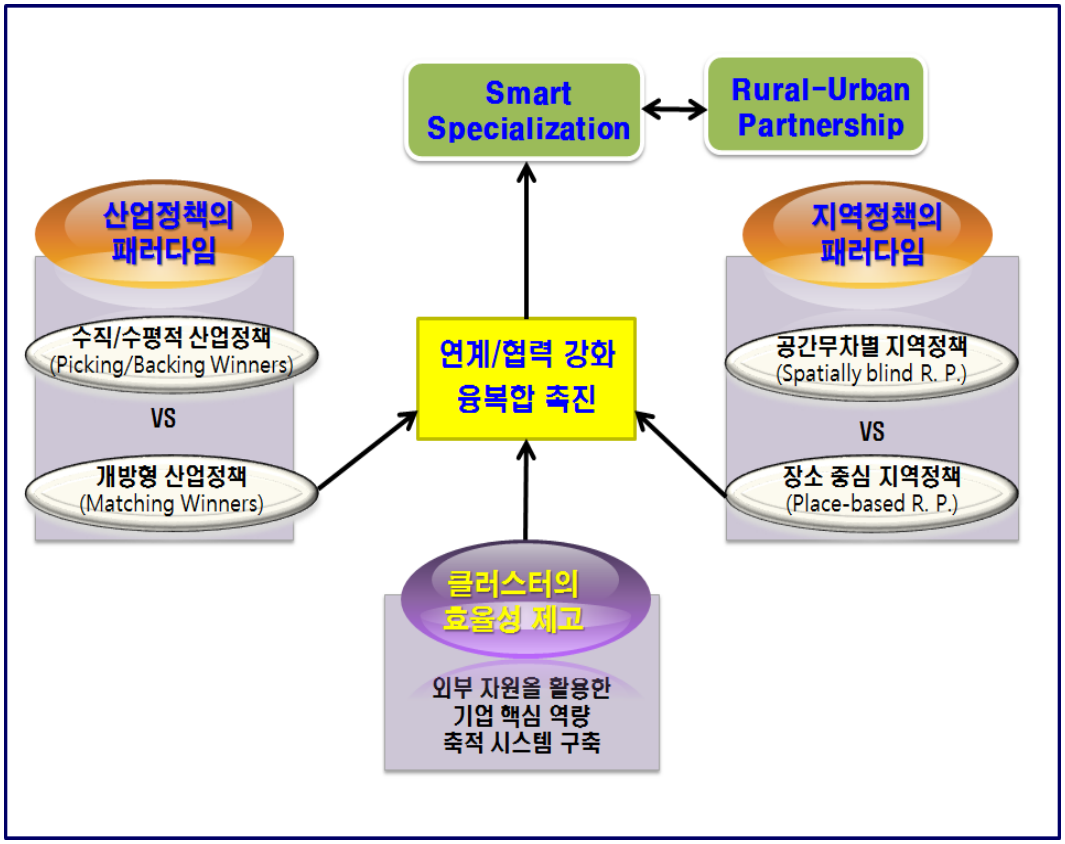
▌기업 외부의 핵심역량 축적시스템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의 효율성 제고

○ 지역 기반의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외부의 핵심역량 축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연계협력 촉진, 융복합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가능함(김선배 외, 2012).

○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산업 특수적(industry-specific) 자산과 지역 특수적(region-specific) 자산의 결합을 통해 기업 외부의 효율적인 핵심역량 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특수적 자산 투자는 개별 기업의 경우처럼 자산특수성이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린 자산(embedded capital)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함.

그림 2-1.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자료: 최윤기·김선배 외(2014)를 토대로 수정

1.2.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2)]

▌도입 과정 및 배경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독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영국과 프랑스 등의 금융 또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정책,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화 등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됨.

○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EU 국가를 중심으로 저성장, 실업문제를 해결할 지역정책 모색과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이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SS)' 기반의 산업육성 전략임.

-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의 지역발전기금(EU펀드)의 고갈로 한층 강화된 지역발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스마트 특성화(SS) 전략이 제안

○ 스마트 전문화 개념은 Foray[3]에 의하여 소개되었으며, EU 전문가 그룹인 Knowledge for Growth(K4G)에서 이 개념을 보다 발전시킴.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산업의 투자 효율성과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을 비롯한 OECD 여러 국가들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

2 본 절은 OECD(2013), Innovation-driven Growth in Regions: The Role of Smart Specialisation를 토대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3 Foray, D. (2011) "Smart Specialization: the concept", Applied Policy Seminar, 4th session of the UNECE team o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Policies, Palais des Nations, 12 May 2011.

○ 기존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반성 및 비판(인프라 구축에 치중, 하향식 정책)으로 효율성을 보다 증대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모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특징

○ 스마트 전문화는 지역의 역량 및 특성을 기반으로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지역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독창적 자산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임.

- 새롭고 혁신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독특한 전문성(R&D와 산업화)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지역의 역량과 경제적 특화의 중요성에 기반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새로운 정책 수단의 발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전달 및 수행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임.

- 수직적인 위계에서 가급적 수평적인 네트워크형으로 정책 형성이나 수행을 강조하여 이해관계자 전반의 창의성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둠.

○ (지역경제 현황 및 역량 분석 강조)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존 지역의 자산과 잠재적 가능성 분석에 기초하는 것임.

○ (혁신 주체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 기업, 클러스터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성공의 필수 요소임.

○ (기업가적 자기발견 프로세스 강조) 연관 산업 부문 간의 융복합 사회 경제적 변혁을 위한 기업과 R&I의 결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임.

○ (연계협력으로 경쟁력 제고) 지역 간의 연계협력으로 임계치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스마트 전문화의 정책 프레임워크

○ EU(2012)는 스마트 전문화론을 현실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RIS3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1단계(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지역의 산업 및 혁신 자원 현황을 분석함.

○ 2단계(거버넌스 구축) 공급자(정부, 기업, 연구 기관)뿐 아니라, 혁신의 수요자(투자자, 시민사회, 국제 전문가)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함.

○ 3단계(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스마트 전문화는 다양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현실적 시나리오, 즉 지역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함.

○ 4단계(우선순위 선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단계에서는 '기업가적 발견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을 통하여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함.

○ 5단계(폴리시 믹스, Policy Mix) 전문화 분야와 관련된 중점 전략과 정책적 도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및 시범사업이 포함된 로드맵 등을 지역의 기타 정책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 6단계(모니터링 및 평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활동에 대한 정확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은 정책 실행자에 의해 수행됨.
  - 전략적 목표에 대한 성취 여부 및 방법을 검증하는 평가는 정책 결정자의 책임 및 지도 하에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수행됨.

2.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성공 요인

2.1. 도·농 파트너십(Rural-Urban Partnership) 전략[4]

▌배경 및 특징

○ 전통적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은 경제, 문화, 공간적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경제 및 지역 발전에 있어 학계와 정부 정책에서 분리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과 보완성으로 인해 긴밀한 연계가 두 지역 모두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기능적 통합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도·농 파트너십은 도시와 농촌의 보유 자원에 기초한 상호 보완성과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발전전략으로 농촌 지역 관점에서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동 전략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자원의 특성과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공생발전 전략
-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임계 규모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창출 전략

---

4 동 절은 OECD (2013), Rural-Urban Partnerships: An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OECD Publishing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도시·농촌의 기능적 연계 모형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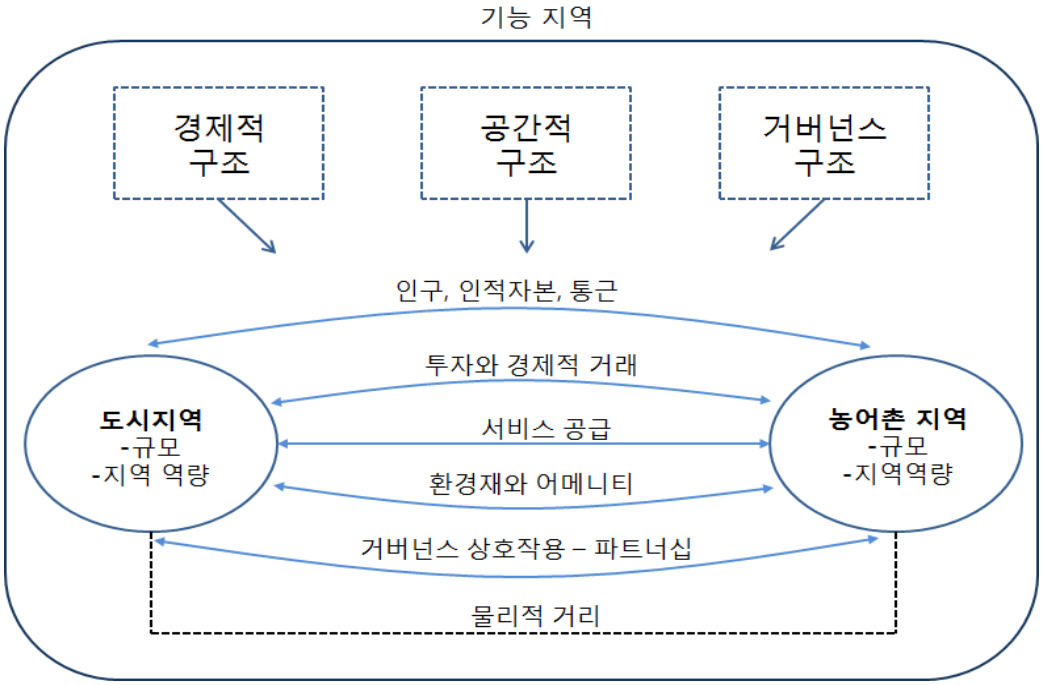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 지역은 기능적 차원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결은 행정구역과는 달리 보통 특정한 영역적 상호작용(기능)이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기능지역의 개념으로 확인됨.

○ OECD(2013)은 5가지 기능적 범주에 대해3가지 구조적 차원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연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OECD, 2013, 송남근, 2015).

- 인구학적 연결: 이주, 귀촌, 통근(commuting) 등을 통한 연계이며, 특히, 통근은 농촌과 도시 통합의 핵심요소이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됨.
- 경제적인 교류와 혁신 활동: 농업과 제조업의 공급사슬과 관련한 농촌과 도시 간 교류, 도시의 연구센터와 농촌 지역 유관조직간 협력 등
- 공공서비스의 제공: 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 교육, 보건, 사회적 서비스 등이 도시와 농촌 지역을 상호 연결
- 어메니티와 환경재의 교환: 도시와 농촌의 환경 외부성, 도시 지역의 농촌 어메니티(맑은 공기, 물) 필요성

○ OECD 보고서는 기능적 연계 모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촌 파트너십을 파트너십의 형성 목적에 따라 경제적 발전, 자연자원 관리, 서비스 공급, 정치적 관련성 및 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요인 및 지역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OECD, 2013).

그림 2-2. 기능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



자료: OECD(2013).

○ (경제적 발전·일반적 지역발전) 일반적인 지역의 이미지와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주요 요인이며, 사례 지역은 BrabantStad, Geelong, Lexington 등을 제시함.

○ (경제발전·공급사슬 연계) 농촌 산업과 도시 혁신역량의 연계, 도시 지역에의 농산물 공급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도·농 통합 노동시장과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주요 요인이며, 사례 지역은 Forlì-Cesena, Nuremberg 등을 제시함.

○ (수자원 관리) 동일 하계망의 유역 분지로 사례 지역은 Forlì-Cesena임.

○ (교통 네트워크 향상) 업무, 소비, 여가상의 교통 이용 패턴 유사 지역의 파트너십으로 사례 지역으로 Prague, Rennes, Nuremberg를 제시함.

○ (무질서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이용 관리) 업무, 소비, 여가상의 교통이용 패턴의 유사성과 주택시장 동태적 변화가 요인이며, 사례 지역으로 Rennes 제시함.

○ (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시설(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사례 지역으로 Extremadura를 제시함.

○ (환경 보호) 잠재적인 환경 외부성과 환경 어메니티의 지역 내 소비가 주요 요인으로 사례 지역으로 West Pomerania를 제시함.

▌도시·농촌의 파트너십 형성 프로세스와 이점

○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그림 2-3>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농촌·도시 파트너십의 형성 필요성 제공 및 계기가 되는 외부요인과 파트너십 형성의 용이성을 좌우하는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음.
  - 이들 외부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농촌·도시 파트너십의 형태, 구조, 범위, 구성원 조합에 영향을 주어 동태적 변화를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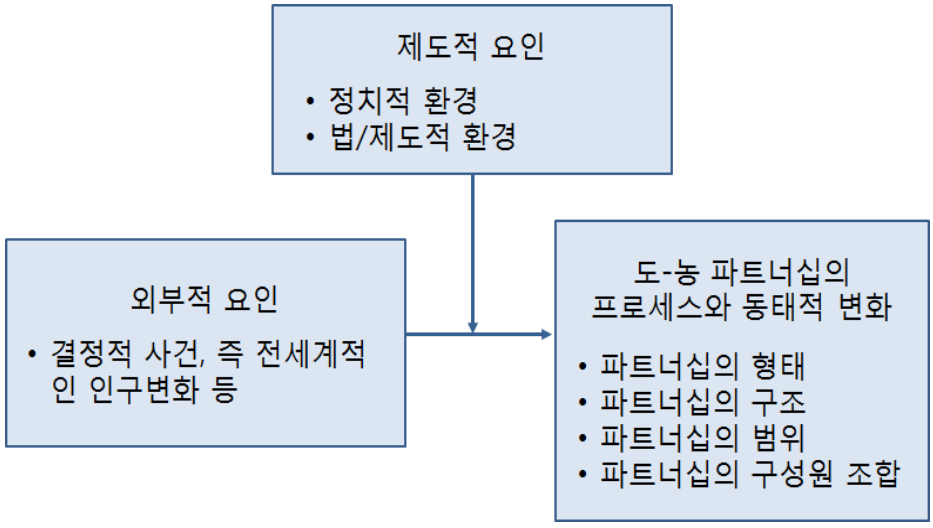
○ 외부적인 요인(External factors)은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촉매가 되는 사건(Catalytic event)을 계기로 농촌·도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상호의존성 및 이해관계가 중요함.

○ 촉매적인 사건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경제 침체 혹은 인구 변화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협력을 유도하는 사건으로 실업, 인구 유출, 서비스 공급 부족, 주변 지역의 경제적 여건 쇠퇴 등이 이에 해당됨.

○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은 정치적/법률적 요인과 결합된 거버넌스 요인으로 국가에 따라 도·농 협의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함.

-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는 도시와 농촌이 자발적으로 협력 조직(협의체 및 기업체)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2-3. 도시·농촌 파트너십의 프로세스와 동태적 변화



자료: Montfort, A. and J. Hulst (2012), OECD(2013) 재인용.

○ 도·농 파트너십은 상호보완성과 농촌 지역의 규모 경제 확보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공공재(혹은 클럽재, club goods)의 생산) 지역의 정체성과 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지역 매력도 증대, 지역의 생산 연계(즉, 농업-제조업)와 경제적 보완성 활용, 자연자원(신재생 에너지 포함)에 대한 접근성용이 등의 이점이 있음.

○ (규모의 경제성 확보)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의 한계 극복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성 확보, 정치적 파워 향상, 금융 재원, 협상력 증대, 서비스 제공에서 있어 서비스의 질, 접근성 혹은 경제성 향상 등이 기대됨.
  - (역량 확보) 지자체의 과업 수행 역량 향상
  - (부정적 외부효과 상쇄) 지자체간의 세금 경쟁과 같은 제로섬 경쟁을 제한
  - (조정실패 극복) 경제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립

2.2. 도·농 파트너십의 일반적 성공 요인[5]

○ 도·농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6차산업 육성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농 파트너십의 다양한 성공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절에서는 Artmann, J. et al.(2012)의 문헌을 토대로 도·농 파트너십의 일반적 성공 요인을 고찰함.

---

5 동 절은 Artmann, J. et. al.(2012), Partnership for sustainable rural-urban development: existing evidences, OECD.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 특히, 도·농 파트너십은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형성되는 것을 주목해야 함.

- 주체들의 결집을 통한 도·농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공유 단계
-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 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운영 단계

○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농 파트너십의 일반적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2-4. 도·농 파트너십의 일반적 성공 요인

출처: Artmann, J. et. al.(2012),

▌연계(Linkages)

○ 도·농 파트너십의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 유형에서 경제, 교통, 인력, 환경 등과 같은 각 부분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농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문 간의 연계를 가진 지역에서 적합함.

▌공유된 문제(Shared problems)

○ 각 부문 간의 연계에 부가하여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공유된 문제를 공동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도·농 파트너십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도시·농촌의 윈(win)윈(win) 전략이 기대되는 상황이 우선이 되며 갈등을 해소 및 관리하는 것도 도·농 파트너십의 목표로 가능함.

▌기능 단위에서의 동질성(Feeling of being a functional unit)

○ 지역의 주체들이 다양한 기능 관점에서 동일 기능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질성이 있어야 도·농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함.

▌전략/공유된 목표(Strategy/shared goals)

○ 도·농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전략 및 목표를 구체화하고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파트너십 구축 초기부터 관련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의 전략과 목표에 동의해야 함.

- 예를 들어 '삶의 질 향상' 혹은 '경제발전'과 같은 목표는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실행에 옮기거나 로드맵을 만드는데 어려우므로 도·농 파트너십의 목표와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정 형태의 거버넌스(Certain form of governance)

○ 거버넌스는 도·농 파트너십의 필수 요소이며, 역 여건에 적합한 좋은 거버넌스의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농 파트너십 거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농 파트너십의 과업의 일부에 해당함.

▌협력의 경험 및 전통(Experience/tradition in co-operation)

○ 도·농 파트너십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형성하는 대규모 파트너십에 해당함.

○ 이러한 관점에서 도·농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체들이 다른 맥락에서 협력의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전통 또한 중요한 요인임.

▌시간(Time)

○ 도·농 파트너십의 요체는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신뢰 기반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도·농 파트너십은 일회성 노력이나 단기간 이루어질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간 협력 지역 내에서 핵심 과제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지평이 필요함.

▌작은 발걸음(Small steps)

○ 도·농 파트너십은 작은 협력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커다란 모자이크에 해당하므로,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다수의 구체적인 프로젝트(Many concrete projects)

○ 도·농 파트너십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참여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를 강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프로젝트는 사업이 많을수록 관련된 주체들과 지역들이 많아지는 이점과 더불어 어느 하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다양한 보상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함.

▌좋은 프레임워크(Good framework)

○ 도·농 파트너십은 소단위 지역에서 형성하는 상향식 프로세스이지만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함.

▌다양한 주체(Different actors)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

○ 도·농 파트너십은 도시와 농촌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경제, 학계 시민사회의의 협력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부문에 일하고 있는 주체들을 결집하는 것임.
- 이러한 다양성은 협력의 프로세스를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목표, 접근 방식, 시간 범주 측면에서는 협력의 양태가 매우 복잡함.
- 예를 들어 정치가는 선거 기간을 고려하고 사업가는 훨씬 더 빠른 결정

에 익숙하고 계획 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염두에 두게 되므로, 다양한 협력 주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

2.3.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효과적인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공공재의 생산 향상, 공공서비스의 규모 경제 실현, 공동 협력 사업과 상호 발전 등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기능적으로 통합된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어메니티를 강화함으로써 영역적인 통합이 촉진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상태 파악이 중요함.

○ 도시와 농촌의 경제 주체들이 기능지역 내의 발전 전략과 프로젝트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공유하는 도전과 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함.
-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 개발이 필요
- 법/규제 등을 포함하여 자원, 정치적 파워 등 통합적 거버넌스 접근 등 농촌·도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환경 마련
- 도시와 농촌 파트너십의 분명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3. 도·농 파트너십의 정책모형 및 정책 이슈

3.1.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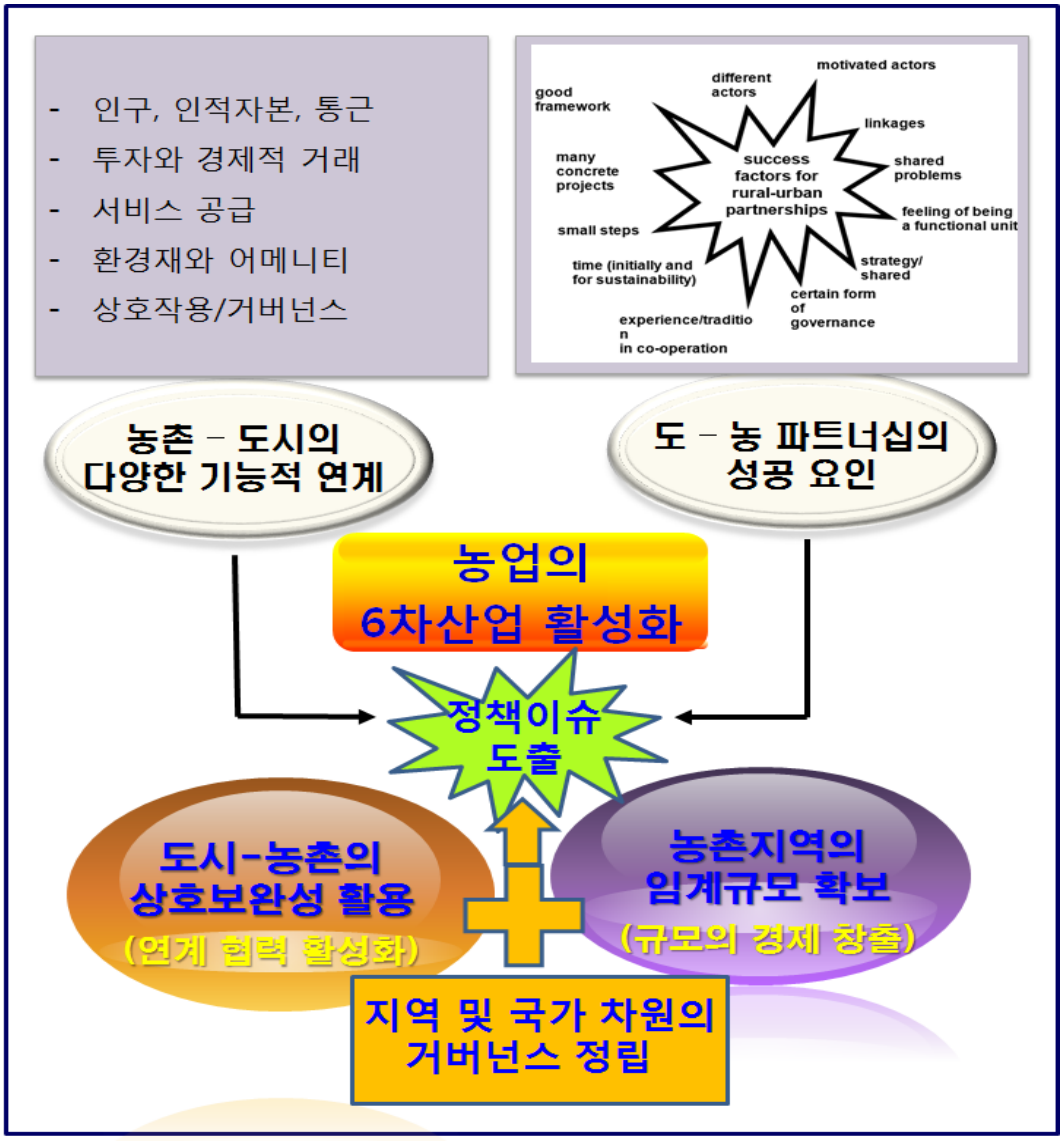
○ 도·농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상호 윈(win)윈(win) 발전 전략에 해당함.
- 인구(인적 자본, 통근), 경제발전(투자와 경제적 거래), 공공서비스 공급, 환경재와 어메니티, 상호작용 촉진(거버넌스) 등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다양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함.

○ 도·농의 파트너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성공 요인이 요구됨.
- 성공 요인으로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연계, 공유된 문제의식, 기능적 동질성, 전략과 목표의 공유, 특정 형태의 거버넌스, 협력의 경험 및 전통, 장기적 노력 등이 필요함.

○ 도·농의 파트너십은 산업 및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반영하고 있는 농촌 산업 및 농촌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곧 농촌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도시 지역의 혁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연계 협력 촉진 전략임.

○ 이상의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및 스마트 전문화 전략, 농촌·도시의 기능적 연계, 도·농 파트너십의 성공 요인을 고려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자료: 저자 작성

○ 이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은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 활용(연계 협력 강화),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의 3대 정책 프레임워크로 설정함<그림 2-5>.

-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 활용) 도시·농촌 지역 간의 부존자원의 상호의존성, 즉, 시장 및 혁신 역량 차원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전략이 필요
-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다양한 기능적 연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의 임계 규모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창출 전략이 긴요
-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 도시와 농촌 지역이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산업 육성의 적정 공단 단위 및 육성 전략 등과 관련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

3.2. 도시·농촌 지역의 상호보완성 관련 정책 이슈

○ 도시·농촌 상호보완성 활용과 관련된 정책 이슈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전략이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요 시장과 다양한 혁신자원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와 관련됨.

▌이슈 1:도시 지역과 연계한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농촌 산업(6차산업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과의 유통망 및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도시 지역과 연계된 수요 시장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농촌 산업 육성(6차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자원 및 역량(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지역 내부(해당 시·군 내부)에서 공급 및 확충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효율성이 있는가?

○ 농촌 산업 육성(6차산업화)에 필요한 혁신자원(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인력교류 및 양성) 연계

○ 6차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자원 및 역량(인력교류 및 양성)을 지역 내부(해당 시·군 내부)에서 공급 및 확충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효율성이 있는가?

○ 6차산업화에 필요한 혁신자원(인력교류 및 양성)을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슈 4: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6차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자원 및 역량(유통망 개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을 지역 내부(해당 시·군 내부)에서 공급 및 확충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효율성이 있는가?

○ 6차산업화에 필요한 혁신자원(유통망 개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을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3.3.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 관련 정책 이슈

○ 농촌 지역의 임계규모 확보와 정책 이슈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전략이 농촌 산업발전에 필요한 임계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특정 시·군에서 특정 개별품목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6차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2~3개 시·군이 연계하여 수개 품목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를 촉진 및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 농촌 지역의 산업발전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공간 단위 설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는가?

제 3 장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1.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정책 목표

▌6차산업의 정의 및 의의[6]

○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 교수는 6차산업을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식품제조)과 3차 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정의함.

-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임을 강조함.

○ 농상공 연대도 6차산업과 연관성이 큰 개념인데,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각자의 경영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신제품 개발, 생산, 수요 개척 등을 수행하는 것임.

---

6 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6차산업 활성화란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공동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7].

▌6차산업 정책 추진 배경과 목표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2014년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5.7%로 1970년대의 약 10% 수준으로 감소했고, 2014년 농가 고령화율은 39.1%로 전국 12.7%의 3배 수준에 달함.

- 농가인구 비중: ('70년) 44.7% → ('80) 28.4 → ('90) 15.5 → ('13) 5.7
- 농가 고령화율(전국): ('05) 29.1%(7.1%) → ('10) 31.8(11.0)→ ('14) 39.1(12.7)

○ 농업소득의 정체·불안정,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

- 협소한 경지면적(0.6ha/1인) 등 불리한 여건으로 최근 10년간 농업소득 증가율은 -0.52% 수준이며 도·농 간 소득격차는 '13.7%P 확대
- 시장개방, 소비감소·정체 등은 농가소득 불안 요인으로 작용

▌6차산업 정책 추진의 목적

○ 농가소득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농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가 부각되고 있는 바, 주무부처에서 설정하는 정책적 추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7 김용렬, 2015, '한국의 농촌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정책', 『지역의 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자료집』, 농촌경제연구원

① (소득 제고) 원물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②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업유형은 중소농, 고령농도 취·창업 가능한 환경 조성
③ (농촌 활성화) 6차산업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농업과 농촌으로 내부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

2. 6차산업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경험[8]

2.1.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

○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학·연·관 등 사업 주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임.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3~4년 동안임.

8 농림축산식품부, 2014,『6차산업화 지원정책매뉴얼』.참조

○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 단체 등이며, 사업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H/W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포괄보조사업)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와 각 시·도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연구 단체 등이며,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는 정액지원, 세부내역 사업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을 결정함.

○ 시·도자율편성 사업이므로 선정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 및 예산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 지원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연계협력 사업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서 2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동 목표를 설정 후 재원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이며 사업 목적 중 일부가 6차산업 촉진임.

-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자체간 벽허물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문화 및 복지와의 융합임.
- 기대효과로는 ⅰ) 지역특화산업 육성 ⅱ) 고용창출, ⅲ) 문화·관광개발로 지역 브랜드 제고 ⅳ) 지역 생활여건 개선 ⅴ) 기타 지역역량 강화를 들 수 있음.

○ 사업 기간 및 지원은 3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보조율 80~90%)에서 국비가 지원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90%의 우대 보조율이 적용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은 산·학·연·관 주체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사업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 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규모 및 기간은 5년간 30억 원 규모이다. 시범사업('05~) 20개소, 본사업('08~) 22개소, 광역사업('09~) 12개소가 운영되었으며, 평가 후 1~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R&D와 연계,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BT·N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신제품 또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1차 × 2차 산업, 1차 × 2차 ×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 효율화 등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내용임.

○ 신청 대상은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신청 기업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선정된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R&D 및 식품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 지원함.

-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에 우대배점을 부여해 식품가공원료 매입, 외식·전처리업체 운영,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신선편이 농산물 시설현대화, 생산자 융복합 식품제조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반구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지원,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지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개발·지식서비스 지원을 위해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음. 기타 우대 지원사업으로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공상 마케팅 교육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우대조건을 부여함.

-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제품 홍보 등 마케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
- 농공상융합형 EXPO 및 KFE 행사시 농공상 융합제품 별도 부스 운영, 농협 하나로마트내 파이롯트 숍 설치 등의 마케팅에 대해서도 지원함.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 사업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체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등 기업경영 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임.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발전가능성이 큰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 3항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선정된 업체에게는 제품 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공동체 관련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통하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신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선, 홍보 및 주민 교육 등에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어 공동체회사의 역량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도록 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개소 당 최대 50백만 원을 지원함. 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 (구)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 촉진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을 시행함.
- 주관 기관으로서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 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 기관의 참여가 필수

○ 선정 절차는 사업 계획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지역에서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앙 단위에서 사업계획 검토 조정을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2011년 사업부터는 지역에서 기획·평가·관리까지 모두 시행함.

○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 사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함.

○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3년 선지원 후 주관 기관을 영리법인화 시행),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 특례법』제정을 통해 시행함.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 지역에 한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 신청 및 특구 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위원회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함.

○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구는 전국 148개로,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함.

- 현재 규제 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 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 53개,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됨.

○ 특구 지정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임.

-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 선정·기획 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

2.3.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구성함.

-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중앙·시도 재능나눔 Pool을 통한 경영컨설팅을 주로 지원함.
- 농식품부의 공동체회사와 사업 내용의 유사성이 있음.

○ 지원 규모는 2년간 최대 80백만 원이다. 1년차에는 최대 50백만 원, 2년차 최대 30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 2013년 기준 총 63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신규로 470개가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된 마을기업 중 160개를 재지정하여 운영함.

○ 마을기업 선정 절차는 마을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여기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시·도에 추천함.
- 시·도는 추천받은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대상을 선별함.
- 시·도가 선별한 마을기업을 부처에 보고를 하면 부처에서 적절성을 검토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함.

2.4. 시사점

○ 통합적 행정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중요
- 관련 부처들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해 시너지 발휘 필요
-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차별화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 필요

○ 정책의 패키지화 및 다양화 필요

- 6차산업의 비전을 가지고 기존 사업들을 활용하더라도 일관된 계획 하에 성과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계획수립, R&D, 실행,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컨트롤타워도 필요함.

표 3-1.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비교

관련 정책	주관 부처	기준 공간	주체	추진 방식	목적	특징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림 축산 식품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산학관연 협의체 중심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농림 축산 식품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농림수산물을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산학관연 협의체 중심
지역연고사업	산업 통상 자원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산학관연 협의체 및 기업지원기관 협력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림 축산 식품부	시·군	사업자	상향식 공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시·군자율로 사업 시행
지자체연계 사업	농림 축산 식품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지자체간 연대
지역특구	중소 기업청	시·군	시·군청	상향식 공모	규제완화	규제 특례 적용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농림 축산 식품부	전국	기업	상향식 공모	농공상 연대 및 협력을 통한 성장	농공상 협력
농어촌 공동체회사	농림 축산 식품부	마을	경영체	상향식 공모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주도
마을기업	안전 행정부	마을	경영체	상향식 공모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주도

3. 중앙정부(농림축산부)의 6차산업 육성 방안

3.1. 비전과 목표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함.

○ 주요 목표는 매출액, 창업자수, 방문객 증가 등으로 요약함.
- 인증자 매출액 증가율: ('14) 11.2% → ('16) 5.0 → ('20) 5.0
- 6차산업 창업자 수: ('14) 760개소 → ('16) 1,600 → ('20) 3,000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14) 549만명 → ('16) 600 → ('20) 800

3.2. 추진 전략 및 주요 내용

○ 6차산업 창업·보육·성장·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6차산업화 기반 조성

○ 기초통계 구축
- 기초실태조사 및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 정교화, 성과 분석 등이 가능함으로 기초통계 인프라를 구축함.
- 도별 6차산업 경영체, 지역자원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조사하는데, 농식품 가공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관광농원 등 6차산업 참여 경영체의 수, 매출액, 종사자 등이 조사 대상

- 2015년 기초실태조사는 ’14년 행정조사 대상인 1만여 경영체를 포함하여 진행함. 대표품목(농가수, 면적, 생산량 등) 및 관광 인프라 등 지역자원 현황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도 함께 조사함.

○ 지원 체계 정비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간의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 간 유기적 연계 및 6차산업 정책포럼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으로 6차산업의 정책 성과를 제고함.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시·도가 기본계획, 6차산업화 지구 등을 고려하여 지특 및 자체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매년)함.

○ 지원 기관 역량 강화

-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자율 공모사업 도입 등을 통해 센터 간 경쟁을 유도함.
- 6차산업 지원센터 인력 보강 및 현장 지원인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

○ 6차산업 브랜드가치 제고 및 소비 기반 확충

- 6차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지향적인 ‘6차산업 제품 BI(Brand Identity)’ 개발, 홍보·마케팅에 활용함.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 창업·보육 지원 강화

- 인턴제 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
  * 지원센터별 3개월간 30대 이하 젊은층 대상

* 한농대에도 6차산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연 1천 명을 교육

-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년: 30개소 → '20: 90)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코칭, 시제품생산 및 판로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

  * 시·군 가공센터 지속 확대 및 노후화된 가공시설 개보수

- 6차산업활성화 자금(300억 원, 2%) 및 농식품모태펀드(100억 원)를 통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6차산업 판매 플랫폼 구축

- 6차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을 구축하고 입점 추진
- 6차산업 제품을 품목, 가격, 유형 등 용도에 따라 검색이 용이하도록 웹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배포
- 유통바이어, MD 등이 참여하는 품평회 및 기획판촉전 등을 통한 우수제품 발굴·판매촉진(연간 8회)

○ 인증사업자 지정 및 관리 체계화

-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선정하여 우선 지원, 인증사업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인증사업자를 체계적 관리, 정보검색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해 경영체별 특성에 따라 코드화하여 DB 구축

○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

- 현장이해도 제고 및 6차산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 언론, SNS, 사례집 제작 및 팸투어 개최 등 주기적·계획적 홍보

▌지역단위 6차산업 촉진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 농산물 생산·가공·관광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주산지를 ‘6차산업화 지구’ 지정(’15년: 9개소 → ’20년: 25)
- 기존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S/W, H/W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 6차산업 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지구별 전담전문가(FD; family doctor)를 구성하여 컨설팅하고 매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전담전문가 제도는 과거 신활력 지역 육성사업의 지역별 FD제도와 유사

○ 규제 특례 발굴 및 적용
- 규제 현장포럼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 6차산업화 지구와 지역특구를 연계하여 지구단위 규제 특례 적용
- 「농촌융복합산업법」 상 의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차산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전후방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 지역별 6차산업 관련 시설 현황을 파악, DB화하여 정보 제공(’15년)
- 전후방산업 융복합 인프라 조성 및 특화농공단지 내실화
- 성과 제고를 위해 융복합산업 관련 유사 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 육성,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사업) 통폐합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 농촌의 전원(田園), 생태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
- 코레일·민간여행사와 협업, 주체 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협업과제 추진

○ 농촌관광 수용태세 개선

-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및 우수 관광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서비스 품질 제고 유도
  * 등급평가 대상 확대('13년: 200개소 → '15년: 350 → '17년: 전체 마을)
  * 평가대상: 농촌체험마을(장관이 지정하는 마을), 관광농원·농어촌민박(신청자)
  * 4개 분야(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70개 항목에 대해 평가
- 농촌사랑상품권 확대 도입 및 사무장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엄선하여 SNS,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적기에 제공함.
- 네이버 모바일홈페이지 플랫폼 모두(MODOO)를 활용하여 홍보함.
- 농촌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숙박 이용 및 특산물 판매 등이 가능한 예약·결제시스템을 도입('16년)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외국인이 선호하는 테마를 고려하여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
- 해외 현지설명회, 팸투어 개최 등을 통해 한국농촌관광 상품 홍보
-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관광 주간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4. 6차산업의 유형 및 참여 현황

4.1. 6차산업의 유형

▌주도 산업에 따른 유형

○ 1차 농업생산이 기반이기는 하나 주도산업에 따라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표 3-2. 주도산업에 따른 유형 및 사례

유형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개별 농가	• 경기 은아목장 • 강원 횡성에덴양봉원 • 전남 보성 우리원 농장	• 제주 한라산 청정원 • 전남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 경기 양평 다물한과	• 경기 남양주 대가농원 • 충북 영동 샤토미소
법인 등 단체	• 강원 화천 토고미마을 • 경남 창원 감미로운마을 • 경기 파주 산촌생태관광마을	• 충남 서천 달고개모시마을 • 전북 임실 치즈마을 • 강원 송천 떡마을 • 전북 진안 와룡마을	• 강원 횡성 금나루무지개마을 • 전남 나주 화탑마을 • 강원 양양 해담마을
마을	• 경북 칠곡 송강매원	• 경남 합천 첫눈에반한딸기 • 경북 영주 미소머금고 • 충남 서산 생강한과	• 충남 예산 사과와인 • 충남 보령 돼지마블로즈 • 전북 진안마을주식회사
시·군 및 광역	• 경북 문경 오미자 • 전북 고창 복분자 • 경북 영천 포도와인 • 전남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 전남 장흥 헛개 •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 전북 완주 로컬푸트 •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 • 제주 가파도 청보리축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창업 매뉴얼”, 2014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 지역여건, 시장 환경, 정책 지원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진 주체에 따라 개별농가 단위, 마을공동체 단위, 법인경영체 단위, 지역단위로 유형화가 가능함.

표 3-3.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및 사례

유형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역단위
가공	• 서산 참샘골호박농원 • 제주 청정원 • 양평 다물한과	• 양양 송천떡마을 • 서천 달고개모시마을 • 횡성 금나루무지개마을	• 평택 미듬영농조합 • 보령 돼지마블로즈 • 영주 미소머금고	• 김포 인삼쌀맥주 • 문경 오미자 • 고창 복분자
음식	• 안동 화련 • 서산 소박한 밥상 • 공주 미마지	• 남원 홍부밥상 • 삼례 비비정마을 • 진도 운림예술촌	• 함양 상림영농조합 옥연가 • 당진 신평 양조장 • 세종 뒤웅박고을	• 제천 약채락 • 문경 산채비빔밥
유통	• 봉화 파머스마켓 • 홍성 풀무우유&평촌목장 • 남원 안터원 목장	• 상주 승곡마을꾸러미 • 안동 삼배마을유통 • 파인토피아 봉화꾸러미	• 파주 장단콩연구회 • 언니네 텃밭 • 김포 엘리트농부	• 완주 로컬푸드조합 • 고창 황토배기유통 • 진안 로컬푸드사업단
관광	• 여주 은아목장 • 횡성 에덴양봉원 • 영동 사토미소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창원 감미로운마을 • 단양 한드미마을	• 예산 사과와인 • 제주 귤림성 • 원주 돼지문화원	• 양평 농촌나드리 • 화천 산천어축제 • 고창 청보리밭축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p.16.

▌창업 목적[9]에 따른 구분

○ 김태곤 외(2013)는 창업 목적에 따라 ①커뮤니티형(지역공동체형), ②프랜차이즈형(계약거래형), ③네트워크형(농공상연대형)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 커뮤니티형은 농촌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생산 법인이나 지역단위 생산자그룹이 생산에서 가공·판매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임.
- 프랜차이즈형은 새로운 기술 보급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생산 법인이나 기업(본부) 등이 지역에서 다수의 영세농가(가맹점)와 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임.
-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및 시장 개척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 내부에서 가공 부문이나 판매 부문으로 진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이나 가공기술, 유리한 판매망 등을 가진 농외 사업체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간 연대 방식임.

---

9 김태곤 외 2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11.

표 3-4. 창업 목적에 따른 유형별 특징

유형	목적	방식	비고
커뮤니티형 (지역공동체형)	• 고령자·여성일자리 창출 • 소득 향상 • 지역공동체 회복	• 생산자 그룹이 중심 • 생산·가공·판매의 통합방식 • 참여자: 1차산업 종사자	• 소규모사업, 중산간지역에 적합 • 다양한 원료농산물 생산, 가공시설 확충, 판매망 개발 등이 과제 • [범위의 경제성]
프랜차이즈형 (계약거래형)	• 신기술 확산 • 부가가치 향상 • 판로 보장	• 선도농가(본부)가 주도 • 선도농가와 다수의 영세농가(가맹자)간 계약거래 방식 • 참여자: 선도농가·영세농가	• 원예·축산부문에 활발 • 생산자 육성과 지역농업 진흥 효과 • [연결의 경제성]
네트워크형 (농공상연대형)	• 신시장 개척 • 신가치 창조 •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 제조업·서비스업이 주도 • 이종산업간 연대방식 • 참여자: 1·2·3차산업 종사자	• 대규모산지, 대규모사업이 유리 • 밸류체인 형성 • [연결의 경제성]

자료: 김태곤 외 2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11.

4.2. 6차산업의 참여 현황

○ 6차산업화 경영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97개의 농가 및 법인경영체가 6차산업화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조사는 행정조사이므로 통계적 신뢰도는 낮으나 전반적 실태 파악은 가능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1×3차형이 5,447개소(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3차형은 3,631개(36.1%), 1×2차형은 1,019개소(10.1%)로 나타나 서비스업으로의 융복합이 상대적으로 수월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5. 주도산업에 따른 6차산업화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주체	업체수	비중
1차×2차		1,019	10.1
1차×3차	유통 (직거래, 직판)	1,777	17.5
	관광	3,369	33.4
	외식	301	3.0
	소계	5,447	53.9
1차×2차×3차	복합	1,630	16.1
	유통	1,839	18.2
	관광	132	1.3
	외식	30	0.4
	소계	3,631	36.0
계		10,09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p.19 재인용

4.3. 추진 주체 유형별 충청권의 6차산업화 대표 사례[10]

▌농가주도형: 충북 영동 도란원 농장 (샤토미소)

○ 주요 품목: 로제와인(sweet), 레드와인(sweet, dry), 프리미엄(sweet, dry)

○ 특징

-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
  - 포도 가공산업을 신성장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영동군의 각종 지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와이너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본격화함.

-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 꿀포도를 이용한 프리미엄 와인, 대나무 통을 이용한 와인숙성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와인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함.
  - 지역 체험관광 상품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 농가체험 발효액 보급 시범사업'을 계기로 체험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
  - 컨설팅을 통해 국악과 과일의 고장이라는 영동군의 특성을 살려 국악과 와인을 결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름마을사람들영농조합'의 풀쌈체험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6차산업화 내용

- 1차 생산물 및 과정
  - 1,500여 평의 포도농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된 특품은 주문택배로 판매하고 있고 있음.

---

10 농림축산식품부, 2013,『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 2차 생산물 및 과정
  - 와인가공·발효실(33㎡), 와인숙성시설(49.5㎡), 체험시설(60㎡) 등을 갖추고, 직접 생산한 포도와 인근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를 일부 수매하여 '샤토미소'라는 브랜드로 스위트, 드라이, 로제 스위트 등 6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음.

- 3차 서비스 상품 및 과정
  - 3차 산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매년 포도 수확 및 와인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도란원 와인카페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오감 만족을 제공하고 있음.

▌마을주도형: 충남 서천 달고개 모시마을

○ 주요 품목: 모시송편, 모시가래떡, 모시한과

○ 추진 주체: 월산리 영농조합법인

○ 특징
- 2005년 '서천 어메니티 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금 1억 원을 받아 농촌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6년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모시떡, 모시공예, 천연염색, 농촌체험 등 농촌체험마을 기반을 마련하였음.
- 마을의 총 52가구 중 46가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노령화 농촌 마을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노령층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음.
- 얼굴 있는 음식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 등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특산품인 한산모시와 관련하여 모시송편, 모시가래떡 등 먹는 모시를 개발함으로써 모시산업을 다각화하였음.

○ 6차산업화 내용

- 1차 생산물 및 과정
  - 주 농작물은 쌀이며 부작물로 16,500㎡ 가량의 모시잎을 재배하고 있음.

- 2차 생산물 및 과정
  - 수확된 모시잎은 전통테마관에 마련된 가공시설에 모여서 송편과 떡으로 제작함.

- 3차 서비스 상품 및 과정
  - 온라인, 휴게소, 직판장, 관광단지 등에서 판매하는 한편, 다양한 농촌 체험을 실시하고 있음.

▌법인주도형: 보령 돼지카페 마블로즈

○ 주요 품목

- 상품: 고품질 돈육(오메가-3함유) 및 돈육가공품
- 서비스: 직영식당(돼지카페), 직영판매장(마블로즈), 햄·소시지 체험, 교육

○ 추진 주체: 서부 충남 고품질양돈 클러스터사업단

○ 특징

-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 영농조합법인 농가원, (주)남부미트
  학: 단국대학교, 청운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연: 축산물등급판정소,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지바이오시스템 부설 생명자원연구소
  관: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 고품질 양돈 산업 시스템 구축
  - 오메가-3를 함유한 국내산 프리미엄 포크인 마블로즈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받았고, 61개 회원농가(2012년 3월 기준)를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양 관리, 출하 관리, 질병 관리 등을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생산 돈육의 품질을 균일화하는 한편, 생육, 지육, 부분육(오메가-3 함유)에 대해서는 HACCP 인증과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음.

- 원가절감 노력 및 안정적 수급망 확보
  - 규모화에 따른 사료 공동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계약 출하를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있음.

○ 6차산업화 내용

- 1차 생산물 및 과정
  - 생육, 지육, 부분육(오메가-3 함유) 등 친환경 웰빙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2차 생산물 및 과정
  -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 3차 서비스 상품 및 과정
  - 식당, 직매장(돈육의 브랜드 홍보 및 직판), 온라인 등을 통해 돈육, 햄, 소시지를 판매하는 한편, 소시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단위형: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 주요 품목: 약초생산, 한약재 유통, 고품질 한방제품, 건강식품, 한방의료서비스 등

○ 추진 주체: 제천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제천시장, 제천시 한방바이오과

○ 특징

- 한방약초산업의 전략적 육성
  - 웰빙, 힐링 등이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동양의학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특화 작목 중 약초를 특화전략 사업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 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제천바이오밸리 내 국내 굴지의 의약업체 20개소를 유치
  - 학: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 연: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대학연구소
  - 관: 제천시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 6차산업화 내용

- 1차 생산물 및 과정
  - 1,227농가(594ha)가 전국 약초 생산의 30%에 해당하는 약초를 재배하고 있음.

- 2차 생산물 및 과정
  - GAP제조가공(7개소) 및 기능성약용작물(23개소)을 제조 가공하고 있음.

- 3차 서비스 상품 및 과정
  - 한약 도소매와 의료관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도매업소 8개소, 한약업사 18개소

  * 의료서비스: 한방병원(1개소), 명의촌(2개소), 한의원(32개소), 휴양의료리조트(2개소)

제 4 장

도·농 파트너십 이슈별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사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제2장(이론적 동향과 정책 이슈: 스마트 전문화와 도·농파트너십)에서 제기하였던 6차산업화의 도·농 파트너십 5대 이슈별로 지역적 차원에서 6차산업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슈 1: 도시 지역과 연계한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인력교류 및 양성) 연계
- 이슈 4: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이는 도·농 파트너십 5대 이슈별로 6차산업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임.

○ 도·농 파트너십 5대 이슈별로 6차산업화 사업의 지역 차원의 추진 사례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충청북도 6차산업화 대표 사례[11]

○ 충청북도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충북 농업의 6차산업화 가능성 대표 사례로는 27개 업체가 있는데, 농축산물 생산기반 9개 업체, 제조·가공제품 생산기반 1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 업체들은 사과, 브로콜리, 황기, 쌀, 애호박, 대추, 한우, 옻, 포도, 감, 호두, 홍삼포크, 인삼, 닥나무, 배추(절임배추), 고추, 대학찰옥수수, 블루베리, 버섯, 콩, 마늘 등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12].

---

11 우장명, 2013,『6차산업화를 통한 충북 농업의 발전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12 충청북도가 각 시·군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로 충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료는 아님

1. 이슈 1: 도시 지역과 연계한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1.1. 현황

○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6차산업의 수요와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안테나숍 설치 및 지원, 각종 컨벤션 센터행사,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였음.

○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에 안테나숍 설치, 충주 등에서 시행한 농산물대축제, 도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체험한마당, 괴산 유기농엑스포 등이 주요 현황임.

1.1.1. 대형마트 입점(하나로마트)

○ 안테나숍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6차산업 우수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제품 기획과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충청북도와 ㈜농협충북유통은 2015년 6월 농협 하나로클럽 청주점에서 충북 농업 6차산업 우수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테나숍을 개소하였음.

- 31개 지역 중소업체의 6차산업 우수상품 100여 품목이 입점·운영되고 있음.
- 충북에서 생산되는 6차 가공식품의 제품 판매, 홍보, 시장 조사, 소비자

반응도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전달해 제품 기획, 생산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표 4-1. 6차산업 우수상품 안테나숍 입점업체(31업체)

시 군	업 체 명	주 요 품 목
청주(5)	㈜무궁화식품	한과, 우엉차
	농업회사법인 조은술 세종㈜	세종오가닉 청주
	농업회사법인 장희㈜	세종대왕어주 약주
	영농조합법인 청원유기농	리얼푸드 토마토
	농업회사법인 청원자연랜드㈜	유제품(요거트, 치즈)
제천(3)	용두산조은술 영농조합법인	신선주, 소나무와 학
	약초생활건강	한초로미 헤어케어세트
	제천한약영농조합번인	한비오가피술
보은(5)	구록원	보은대추 생녹용액
	공식품(영)	참기름, 들기름
	보은대추한과	대추유과, 엿강정
	보은애니실크	누에건강 청국장환, 뽕잎차
	보은 정스웰	발효녹용
옥천(1)	비락지엔비	기력전통닭죽
영동(5)	컨츄리농원	와인, 산머루 와인
	AMS영농미래법인㈜	원드라이(스위트) 와인
	상모영동미래농업㈜	포도즙, 와인
	불휘농장	시나브로 드라이(스위트) 와인
	사계절메주영농조합법인	청국장환, 청국장
증평(2)	장뜰영농조합법인	버섯죽, 홍삼죽 등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홍삼선 홍삼진액
진천(4)	㈜콩세상	작두콩차, 청국장
	만디식품	만디골 된장·청국장
	다오네영농조합법인	발효장아찌원액, 갈비양념
	자라식품농장	진홍삼
괴산(1)	괴산 숲골농원	으뜸백도라지즙(청)

시 군	업 체 명	주 요 품 목
음성(3)	영농조합법인 한그루	표고장류
	수정산농원	된장
	코메가	생들기름
단양(2)	농업회사법인㈜단양농특산	아로니아 조청, 마늘고추장
	농업회사법인㈜소세골농장	유기농 발효수수

1.1.2. 농산물대축제

○ 지역축제의 상당수는 농산물이 거래되는 지역축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산물의 거래의 특성상 계절성과 부패성으로 인한 가격 변동과 공급의 탄력성 저하 등의 취약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농산물의 판로 확장이라는 유용한 매개체 역할을 함.

○ 지역축제 형식을 차용하여 인근 도시 주민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농촌 상품 수요 창출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각종 체험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개최되는 행사임.

▌충주 농산물 한마당 축제 (2015년 10월 31일 ~ 11월 1일)

○ 충주에서 생산되는 충주사과, 충주 밤, 천등산고구마 등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축제를 개최함.

○ 체험부스와 함께 문화 행사가 열리며, 축제 기간 중 충주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 (상행선 충주휴게소에서도 축제기간 동안 운영)함.

그림 4-1.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 모습

▌보은 대추 축제 (2015년 10월)

○ 보은에서 생산되는 대추, 사과, 버섯류, 잡곡류, 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여 94억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기록하였으며, 보은 주력 농산물인 대추는 축제를 전후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음.

○ 특히 보은 대추축제는 '100만 관광객 유치, 100억 농특산물 판매'를 목표로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체험행사 등으로 대추 판매 뿐 아니라, 보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음.

- 행사 개최 시기도 가을 산행계절에 개최하여 보은군 속리산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추축제로 유도함.

그림 4-2. 보은 대추축제 모습

▌기타 축제

그림 4-3. 충청북도 기타 축제 모습

영동 포도축제 (2015년 8월)

음성 고추축제 (2015년 9월)

1.1.3. 농촌체험한마당

○ 농촌체험한마당 행사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도내 70여개(2차 신규인증 신청 포함)의 6차산업 인증농가들과 함께 “6차산업 우수사례 및 우수상품”들에 대한 홍보·체험 행사를 통해 향후 도내 6차산업 활성화와 6차산업 우수 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도내 6차산업 인증농가(70개)들과 시·군 농촌체험마을(56개), 농촌체험교육농장(35개), 농촌형 마을기업(75개), 사회적기업(125개)들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연대감을 고취하였음.

- 수능 후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관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함.

○ “농업 6차산업과 어울려 놀다”란 주제로 2015년 11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청주문화산업단지에서 개최되었음.

- 충북농업기술원, 충북대학교BT융복합농생명6차산업인력양성사업단,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사)충북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사람과 경제가 공동후원하였으며, 3,000여 명(학생 2,000여 명, 일반시민 1,000명 등)이 참여하였음.
- 충북농업기술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충북대 BT융합농생명6차산업화인재양성사업단, (사)사람과 경제 등 전국 최초로 도내 농업 6차산업 관련 6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 제2차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우수상품 유통품평회, 충북 6차산업 활성화 정책 포럼, 6차산업 우수상품 판촉행사 (시민평가단 모집 운영), 체험 홍보

부스 운영 - 40개동(체험부스 15개, 홍보부스 25개) 등
- 충북 농업 6차산업 우수상품 및 우수사례 홍보 운영: 25개소
- 충북 우수 농촌체험마을·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15개소
- 6차산업 인증농가(20개소): 코메가, 컨츄리농원, 청원자연랜드 등
  • 생태환경(6개소): 꽃마당교육농장, 흙살림, 수안보곤충박물관 등
  • 향토음식(7개소): 소세골, 선돌메주농원, 장희도가 등
  • 전통문화(5개소): 웃는옹기, 닥나무와 종이, 푸르미농원 등
  • 협동조합(2개소): 보은 짚풀공예협동조합, 진천 공예사업협동조합 등

1.1.4. 괴산유기농엑스포

○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전세계 유기농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ORGANIC KOREA' 브랜드 구축이라는 비젼으로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 일원(유기농 엑스포 농원)에서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개최되었음.

그림 4-4. 괴산유기농엑스포 개요

자료: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생태적 삶 -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 ("Organic Life - Science Meets the-Public") 란 주제로, 10대 주제전시관, 7대 야외전시장, 엑스포농원, 유기농의·미(醫·美)관, 유기농 산업관, 컨벤션(학술회의), 체험·공연 이벤트, 직거래장터를 주요 내용으로 개최되었음.

○ 엑스포 개최를 통해 108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제품 상담실적 1억 8,000만 달러, 판매실적 8억 5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음.
- 충북유기농업연구센터, 유기농생태체험관, 유기농원, 세계유기농협회 아시아본부 등이 괴산에 입지하게 되었음.
- 지역 농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친환경 이미지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1.2. 문제점

▌도시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미흡

○ 2015년 6월 6차산업 경영체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37%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입, 성공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 추진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지역 농축산물을 단순히 가공하여 유통할 경우 시장과 소비자의 외면은 불가피하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 증대,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최근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반 도시민의 선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시장 조사를 통해 도시민이 선호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이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트랜드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 결여

○ 정보화의 진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접근 경로가 매우 다양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낙후한 경영 마인드로 인해 트랜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음.

○ 6차산업 생태계의 최종점은 소비자라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중심의 접근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주체(생산자·가공자·유통자), 지원 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연구개발, 경영지원) 등을 주축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3. 정책 방향

▌시장지향형 6차산업화 육성 전략 수립

○ 6차산업 수요자의 특성, 수요의 변화, 선호도 분석 등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급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임.

-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공급자 스스로 시장 개척 및 확대를 하도록 해야 함. 공급자의 역량 강화, 공급자간의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 1차 산업 기반 사업모델은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므로 시장에 적합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이 필수적임.

-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6차산업화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6차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6차산업 인증사업 제품의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활용하여 6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숍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6차산업과 국민의 접점을 확대하고 안테나숍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상품생산에 반영함.
-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폐지 또는 축소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높은 상품에 투자함.

2.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2.1. 현황

○ 충청북도 내 혁신기관이 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전수하는 기술개발과 기술지원 연계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

- 농업기술 뿐 아니라,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건강식품 등으로 상품화하고, 1차 농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2차 상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를 개발하여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의 현황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와 영동대학교 연계 포도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마을기업 지원사업), 제천 한방바이오밸리를 들 수 있음.

2.1.1.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는 포도 주산지인 옥천에 설립된 도립 연구소로 1992년 2월 28일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옥천시설포도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 포도홍보관을 준공하였음.

○ 옥천 포도연구소는 포도농가에 현장 애로기술의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며, 교잡육종 등에 의한 우량 신품종 육성, 생리장해 경감 및 병해충 방제 연구, 관리노력 절감 및 숙기 촉진을 위한 연구, 가공, 이용 등을 통한 비상품과

활용 연구, 포도재배법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농가에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음.

▌FTA 대응 수출용 포도 신품종 육성(중점과제)

○ FTA 대응 수출용 장기 저장성·고당도·무핵 포도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세대 취향의 머스캣 향, 고기능성, 특이 모양의 생식용 포도 품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포도 유전자원 수집하고 평가하여 Frontenac 종 등 50품종, 자생머루 5종을 자체 개발하였고, 교배육종 방식으로 포도 품종을 개발하여 MOA 종과 자랑 종간 교배 등 10개 조합이 성공하여 상품화되었음.

○ 신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FTA 등 외국산 포도 및 농산물의 공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포도재배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함.

- 농가 맞춤형 포도 육종으로 포도 산업에 활력을 주었으며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였음.

▌육성된 포도 신품종의 재배법 확립

○ 신품종 '자랑' 포도의 안정생산을 위한 품종의 재배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포도 자근묘를 조기 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적기 출하가 가능하여 시세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음.

○ 포도 재배법 확립 사업은 포도 '자랑'품종을 적정 대목으로 선발하여 5BB 등 3품종을 개발함.

- 또한, '자랑'품종 빈가지 예방을 위한 적심처리 효과를 규명하여 부초 2매 적심 등 4처리와 포도 자근묘 생산을 위한 삽수채취시기 구명, '자랑' 품종 열과방지를 위한 환상박피 효과를 구명하였음.

○ 이를 통해 ‘자랑’품종을 2018년까지 무가온 하우스 면적의 10% 점유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랑’품종의 고품질 안정 생산으로 지역농가에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기후변화 대응 및 경영비 절감 안정 생산 연구

○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경감 및 내재해 안정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목적임.
- 포도 가온재배 방법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사업 내용은 동해 예방을 위한 포도 보온피복재 선발, 질소 및 착과 수준에 따른 동해 발생 정도 연구, 경영비 절감을 위한 포도 가온재배 모델 개발, 포도 생물계절 양상 변화와 품질의 연관성 연구 등임.
- 이를 통해 포도재배의 내재해 연구를 통한 피해 최소 경감기술 개발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킴.
- 가온 난방비 절감을 통해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

▌친환경 포도 재배를 위한 해충 및 잡초제어 연구

○ 친환경적 포도 병해충 및 잡초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
- 포도애털날개나방 발생생태와 방제법을 연구, 시설포도원 미소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식초를 이용한 포도원 친환경적 잡초방제 기술을 개발하였음.

○ 시설포도원에 실질적인 무농약의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게 하는 재배환경을 마련하였으며, 고품질 개발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었음.

▌포도 재배 생력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생력화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한 신개념의 포도 봉지를 개발하였고, 간이 비가림 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음.

- 포도 품질향상을 위한 봉지재질을 망사 등으로 개발하였고, 포도 봉지 씌우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봉지 결속 방법을 개선하여 일시결속 등으로 봉지씌우기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킴.
- 강우 및 폭염피해 개선 포도 간이 비가림 시설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강우를 차단하고 환기를 가능하게 함.

○ 포도의 생력화 및 기술 산업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 포도연구소는 새로 육성된 포도 '충랑', '청포랑' 두 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하였음.

-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충랑(忠琅, 충북대표 포도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포도를 의미)'과 '청포랑(淸葡琅, 충북 대표 청포도로 충북의 맑은 이미지를 의미)' 두 품종이 FTA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4-5. 포도연구소 출원 포도 품종

품종: 충랑	품종: 청포랑

2.1.2. 충북테크노파크와 영동대학교 연계 포도 연구개발

○ 충북농업기술원, 영동군, 영동대학교, 포도연구소 등 산·학·관·연 협력단을 구성하여 국산와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에 전국 최초 와인연구소를 신설하였음.
- 식품가공분야 전문가 3명, 재배분야 전문가 3명, 행정관이 근무하고 있음.

○ 와인연구소는 명품와인 개발, 와인산업 육성 관련 연구,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농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와인코리아,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등으로 연매출액 40~50억 원을 달성하고 있음.

그림 4-6. 충북 영동 와인연구소

2.1.3.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 제천 한방바이오밸리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한방바이오 허브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초생산, 한약재 유통, 고품질 한방제품, 한방의료서비스, 건강식품 등 한방관련 생산부터 제조, 유통, 서

비스까지 한방약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웰빙, 힐링 등이 중시되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산·학·연·관이 협력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밸리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한방바이오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장기 계획임.

그림 4-7.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산·학·연·관 현황

구분	분야별 산업체 현황
산	• 약초재배 : 1,227농가 594ha / 영농조합, 작목반 44개소 • 약초가공 : GAP제조 가공시설 7개소 / 기능성약용작물 가공업체 23개소 • 약초시장 : 74개소 / 엑스포공원 약초판매장 12개소 • 한약도소매 : 도매업소 8개소 / 한약업사 18개소 • 의료서비스 : 세명대부속 한방병원 1개소 / 명의촌 2개소 / 한의원 32개소 휴양의료리조트(리솜, 청풍레이크) • 산업단지 : 7개소(바이오밸리 2, 테크노빌 5) • 약초생산유통 : 32개업체 • 제약/화장품 : 14개업체 • 한방식품 : 45개업체 • 한방음식 : 39개업체 • 인터넷쇼핑몰 : 36개업체(클러스터회원) • 공동브랜드 : 자연인(23개 업체) • 한방서비스 : 한방생명과학관, 발표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한방어린이공원
학	• 대학 :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연	• 연구기관 (5개소) : 세명대한의학연구소, 세명대 천연자원의약연구소, 대원대학 식품기술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 기업부설연구소 (8개소) : 유유제약, 휴온스, 화성바이오팜, 보람제약, 일양약품, HLVS, 아워홈, 한국인삼공사
관	• 지원기관 : 시청, 도청, 중기청, 충북테크노파크 전략기획단 • 재단법인 : (재) 한방바이오진흥재단

○ 한방 바이오밸리는 약초재배가 1,227개 농가가 594ha 면적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영농조합 및 작목반이 44개소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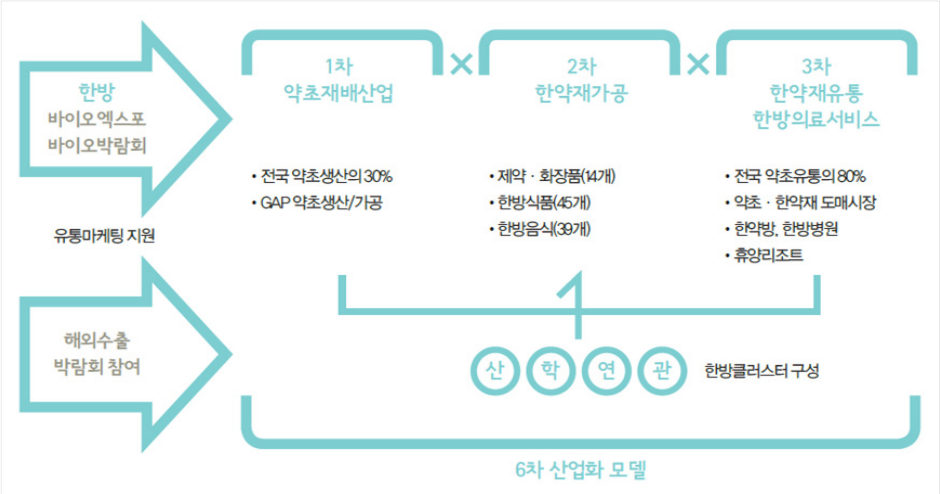
○ 약초가공 산업으로 GAP제조가공을 하는 사업장 7개소, 기능성약용작물을 가공하는 사업장 23개소, 한약도소매업소 8개소, 한약업사 18개소, 의료서비스로 한방병원 1개소와 명의촌 2개소, 한의원 32개소, 휴양의료리조트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한방 바이오밸리에서 생산된 상품이 13개국으로 수출되어 16억원의 수출을 달성함.

○ 한방약초 산업의 6차산업화는 정부의 신활력 사업, 충북도의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사업 등을 유치한 제천시는 신동력 산업 구축을 위해 한방약초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

- 한방약초의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한방관련 의료, 문화, 지식서비스가 융합된 글로벌 수준의 한방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함.

그림 4-8. 한방약초 산업의 6차산업화 모델



2.2. 문제점

▌추진 체계 간 협력 및 연계성 부족

○ 중앙정부 부처, 도의 농정당국, 도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차산업활성화센터, 기초지자체 등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유사한 사업을 중앙부처별로 도 및 도의 산하기관별로 별도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로 인해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

▌개별농가에 기술이전 및 사업의 다양성 미흡

○ 농가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기 보다는 개별 농가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지원규모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업종 간 또는 품종 간 융복합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지 못함.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상품화하여 가공하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차별화된 전략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산업 간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1차 농축산물 생산, 2차 가공·제조 그리고 3차 서비스업(유통, 관광 등)의 단순결합이 아닌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융·복합 6차산업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산업 간 단순결합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6차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3. 정책 방향

▌추진 체계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의 농정당국, 도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차산업활성화센터 등의 칸막이를 낮추거나 제거하고,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함(일종의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추천됨.).

○ 일차적으로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의 수직적 연계체계를 잘 활용하고,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역의 유관조직간의 수평적 연계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함.

- 농촌 시·군 단위에서 필요한 혁신자원의 목록과 도시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혁신자원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매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함.
- 현재의 6차산업활성화센터 간의 전국적 컨트롤타워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특정 6차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촉진, 기업의 1촌 지원 프로그램 촉진 등을 캠페인으로 벌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추진함.

▌기술이전 확대 및 사업다각화

○ 지역·품목·이종산업 간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동일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6차산업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대부분 사업비 지원을 조건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상품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혁신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이전해줌으로써 농가가 기술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추가적인 요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가 보다 현실적인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3.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인력 교류 및 양성 연계

3.1. 현황

○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6차산업의 수요와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안테나숍 설치 및 지원, 각종 컨벤션 센터행사,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였음.

○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에 안테나숍 설치, 충주 등에서 시행한 농산물대축제, 도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체험한마당, 괴산 유기농엑스포, 등이 주요현황임.

▌BT 융합 농생명 6차산업화 인재양성 사업단

○ 2014년 7월 충북대학교에 BT 융합 농생명 6차산업화 인재양성 사업단 출범하였음.

- 충북대 BT융합 농생명 6차산업화 인재양성 사업단은 지난 6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돼 우선희 단장(식물자원학과 교수)을 주축으로 식물자원학과, 축산학과, 환경생명화학과 등 농생대의 8개 학과와 수의학과, 약학과가 참여하는 대형 사업단임.

○ 사업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1단계사업) 110억 여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생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장학금 확대, 해외연수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취업률 제고할 예정임.

- 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특성화사업(CK-Ⅰ) 1차년도(2014.7~2015.2) 서면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국고지원을

받게 된 것임.

○ BT융합농생명 6차산업화인재양성사업단은 충북대의 농업생명환경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에 소속된 10개 학과 1,500여 명의 학부재학생을 지원하는 대형사업단임.
-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특성화 교육 실현, 현장 중심의 자기 주도적 특성화 교육 확립을 통해 현장 감각이 우수한 인재양성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 BT융합 농생명 6차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2. 문제점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체계 부존재

○ 농촌 지역은 항상 전문인력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도시 지역과의 인적교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농촌 지역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고 해도, 개별 단계별로 지역 내에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품의 다각화 및 사업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최근 귀촌자를 활용하여 6차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사례가 성공사례로 회자되는 것도 농촌 지역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3.3. 정책방향

▌전문인력 공급시스템 마련

○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이 농촌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공급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공급시스템의 사업 내용으로 먼저, 귀농·귀촌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천됨.
- 귀농·귀촌인이 6차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장려하여 귀농 후 농촌 지역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사회적기업을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육성함으로서 농촌에 전문인력을 보완함.
- 이와 함께, 도시 지역 (사회적) 기업, 조직,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알선하거나 실행을 지원함으로서 이들 기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농촌 지역에 활용함.

○ 농촌 지역의 관련 창업·취업 기회 장려하는 방안으로 6차산업 활성화 자금 및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하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임.
- 도 단위에서 교육, 창업보육, 인재 매칭 등의 시스템 작동 가능한 체계 구축하고 지역별 현장 인턴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계함.
- 과거 신활력 사업의 Family Doctor 제도를 차용, 컨설턴트에 의한 지속적 코칭 및 컨설팅 체계 구축하고 컨설턴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이용함.

4. 이슈 4: 농촌과 도시 지역과의 혁신자원(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4.1. 현황

○ 농촌·도시 지역의 혁신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6차산업화 인증제 운영, 현장코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가 운영되어 농가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전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충북 6차산업화 인증제를 통해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에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6차산업화 현장 코칭사업을 통해 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 애로, 현장형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4.1.1. 충북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 충북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는 충북 지역의 6차산업화 창업, 사업화, 활성화, 판로 구축 등 단계별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연계와 6차산업 관련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3개 영역으로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6차산업화 현장 코칭, 안테나숍 운영임.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사업은 인증심사, 교육 및 역량강화,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및 발간물 제작임.
- 사업자인증 제도는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임.
- 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업체로 지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육성하는 사업임.

○ 6차산업화 현장 코칭사업은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등 6차산업화 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애로, 현장형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성장 도모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산림조합이며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안테나숍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괴산 숲골농원, 농업회사법인 ㈜단양농특산, 농업회사법인 ㈜소세골농장, 공식품(영), 보은대추한과 등 현재 26개 안테나숍이 운영 중에 있으며, 찹쌀유과, 향기나도라지액, 세종대왕어주약주 등 37개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음.

4.1.2. 충북 6차산업화 인증제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공인인증 제도를 운영함.

○ 농산물 및 농업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대상으로한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유통 및 판로확보, 기업 및

상품홍보 및 마크사용의 혜택이 주어짐.

- 자금 지원은 6차산업화 융자자금(연 300억 원), 전문펀드 조성(연 100억 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 지원
- 경영컨설팅은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 유통·판로는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프리미엄제품으로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생활용품 등) CJ(올리브영), 코레일(명품마루 등), 네이버(산지직송), 공영홈쇼핑 등에서 유통 판매됨.
- 홍보는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함.
- 마크 표기 사용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6차산업 BI'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사용 허용(사전 협의)
- 우수사업자로 6차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

그림 4-9. 충북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인증서 전달식

자료: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4.1.3. 충북 6차산업화 현장 코칭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등 6차산업화 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 애로, 현장형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 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산림조합이며, 지원 분야는 경영, 기술, 마케팅 등임.

○ 지원 내용은 경영체당 연간 최대 4회 코칭하며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함.

- 코칭비용은 회당 500천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며, 작목반·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개별 경영체와 동일한 자부담 적용됨.

표 4-2. 충청북도 6차산업화 현장 코칭 개요

분야	코칭 지원분야
경영	○(공통) 세무, 법률, 금융 등 ○(경영) 경영전략, 생산성 향상, 지적재산권 등 ○(제품) 디자인, 유통, 체험프로그램, 메뉴개선 등 ○(홍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
기술	○(위생) HACCP,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 ○(인프라) 공장신설·신축, 인테리어, 공정개선 등
기타	○상기 분야 외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4.2. 문제점

▌도시 중심의 혁신자원 구축

○ 오랜 기간 동안 산업개발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된 이유로 농촌 지역에 혁신자원이 부족한 것임.

○ 마케팅, 기술개발, 사업지원 서비스 등이 산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혁신자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농촌 지역임.

4.3. 정책 방향

○ 6차산업 관련 기관 간 또는 농가 간 계열화 및 조직화 등을 통해 조직의 크기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계획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단위 혹은 마을단위의 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혁신자원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간 기관 간 연계 또는 연대를 통한 사업의 광역화가 필요함.

○ 연합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및 가치를 상승시켜 마케팅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 6차산업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5.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5.1. 현황

5.1.1. 와인트레인 공동운영 사업

○ 코레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은 영동의 포도축제와 충남 금산 인삼축제와 함께 와인인삼트레인을 맞춤형 코스로 운행하고 있음.
- 영동 포도축제와 금산 인삼축제기간 중 매일 와인인삼트레인을 운행하며 영동 포도축제 때에는 와이너리코스와 포도따기체험, 포도축제장 관람을,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인삼캐기체험, 인삼시장관광, 와인코리아에서의 족욕 등의 일정이 포함됨.

○ 코레일이 충남 금산, 충북 영동과 함께 전국 최초로 새로운 테마열차 '와인인삼트레인'을 2009년 3월 18일 처음 운행되었음.
- '와인인삼트레인'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충북 영동에서 와인 체험을 하고,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여서 인삼전시관을 견학하게 되는 코스로 구성되며,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영동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와 연계되어서 운행되고 있음.

○ 와인트렌인 사업은 2006년 12월 운행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 3월 와인인삼트레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림 4-10. 와인인삼트레인 모습

그림 4-11. 와인창고 견학

그림 4-12. 금산인삼관 견학

5.2. 문제점

▌지나친 품목위주의 사업

○ 6차산업뿐 아니라 농업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써 산업개발 1차적인 단계에서는 지역별 특산품 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6차산업 주체로서 농업경영체, 농촌 주민을 동원하는데 유리함.

○ 품목위주의 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지나치게 지역 생산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지역에 따라 3차 산업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2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으나, 원료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6차산업이 진행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5.3. 정책 방향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사업의 광역화

○ 인접한 지역이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을 통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의 지역행복생활권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구현 가능하나, 현재 지역생활권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중심의 권역이 아님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임.

○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간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여러 지역이 연대하여, 자원의 공동 이용체계 구축을 지원(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시설 이용, 저온저장고 등의 인프라 공동이용, 원료 및 자재 공동이용으로 비용 절감 등)하고, 이윤 분배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지역축제의 순환 개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 간 사업 협력이 가능함.
- 상품 및 서비스 완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여러 지역이 연대하여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

제 5 장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과 6차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1. 6차산업 활성화 정책구조 평가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의 활성화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농촌 산업 육성 정책임.

○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추진 주체에 따라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법인 경영체, 지역 등으로 다양하고 영세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지원하는 매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음.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촌 산업 육성 및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영세한 다수의 지원 대상에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시켜야 하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지원 대상도 영세하고 다양하고 그 수가 많으며, 지원 프로그램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임.

○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 구조 평가에서도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정책적 필요성 및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 간의 정합성은 양호하지만 사업의 성과 제고 등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김선배·송우경 외, 2014).

○ 타켓산업 설정 부분을 살펴보면, 6차산업화 정책은 전략산업 설정보다는 지역단위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성화 정도는 수평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성과 특성화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6차산업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중점 타겟산업 육성 전략 관점에서는 미흡함.

표 5-1.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6차산업화 정책평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결과	문제점
타켓 산업 부문	전략산업설정 유무	전략산업 설정보다는 지역단위 조직화에 중점	- 대체적으로 중점 타겟 산업 육성 전략 관점에서는 미흡
	전략산업 타켓팅	수평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성과 특화성은 다소 미비	
지원 기능 부문	지원사업 유무	수요 대응형 개별적 지원	- 타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성 많음 - 개별적, 단기적 성격이 강함
	지원사업 운영방식	수요 대응형 개별적 지원	
정책 구조 부문	RIS 정책목표 부합도	정책부합도 높음	- 기존 사업보다 자발적 네트워킹은 강화 되었으나 자립성은 한계 - 수요조사 미흡으로 성과창출 제약
	목표와 전략 (세부사업) 정합성	목표와 전략간 정합성 보통	

자료: 김선배·송우경 외(2014).

○ 6차산업화 정책의 지원 기능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은 수요 대응형 개별적 지원 방식이고, 지원사업 운영방식 또한 수요 대응형 개별적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타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성 많고, 개별적, 단기적 성격의 지원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 6차산업화 정책의 구조를 지역혁신(RIS) 정책의 부합도 측면에서는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목표와 전략(세부사업) 정합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6차산업화 정책은 기존 사업보다 자발적 네트워킹은 강화되었으나 자립성은 한계가 있으며, 수요 조사 미흡으로 성과 창출에 일정 정도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도·농 파트너십의 5대 이슈별 정책과제 요약

▌이슈 1: 농촌과 도시 지역과의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형성에 노력해 왔으나, 향후에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형성 및 창출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6차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통합브랜드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숍 확대
- 판로 다양화 지원(현대백화점 명인명촌, 코레일과 협력 프로그램, SNS 마케팅, 명절시의 패키지상품 등)

▌이슈 2: 농촌·도시 지역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계

○ 최근에는 기술지원에서 시·군 지역 내를 벗어나 외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농촌 시·군에는 활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제한적임.

○ 도의 농정당국, 도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차산업활성화센터 등의 실질적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국 단위의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 및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
- 재능기부 프로그램, 기업의 1촌 지원 프로그램 촉진

▌이슈 3: 농촌·도시 지역의 인력교류 및 양성 연계

○ 농촌 지역은 지역 내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와의 인적 교류에 목말라있는 상황임.
- 지자체(충북도 사례) 차원에서도 일부 사례(충북대 6차산업화 인재양성사업단)가 있으나, 대부분 개별농가에 대한 교육이 산발적으로 실시

○ 도 단위에서 교육, 창업보육, 인재 매칭 등의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교류 및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6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귀농귀촌자의 활용
-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 Family Doctor 제도를 차용한 코칭 및 컨설팅 체계 구축

▌이슈 4: 농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 오랜 기간 동안 산업개발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되어 비스니스 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것이 농촌 지역의 현실임.

○ 지자체(충북도 사례) 일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브랜드 및 인증제의 난립으로 인해 인증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과관리가 미비한 상황임.

○ 농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계열화, 조직화 등을 통해 마케팅파워 제고
- 연합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통합 브랜드 개발
- 6차산업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

▌이슈 5: 인접한(농촌) 지역들 간의 연계 및 통합

○ 지역별 특산품 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6차산업 주체로서 농업경영체, 농촌 주민을 동원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역 생산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측면에 문제점 야기하고 있음.

- 개별농가 주도에 따른 영세성, 6차산업 주체 간 연대의식이 미흡, 자생력 부족

○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목표 공유(공동 학습 지원)
- 자원의 공동 이용체계 구축 지원
- 지역축제의 순환 개최 시 인센티브 제공

○ 도시·농촌 파트너십, 인접 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촌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가칭 '농촌 산업 발전권' 설정 및 추진이 요구됨.

- 현재 지역행복생활권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구현 가능하나, 6차산업 및 농촌 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및 산업 육성 중심의 권역이 아님.

3.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 및 정책과제

○ 본 연구 제2장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으로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 활용(연계 협력 강화), 농촌 지역의 임계 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의 3대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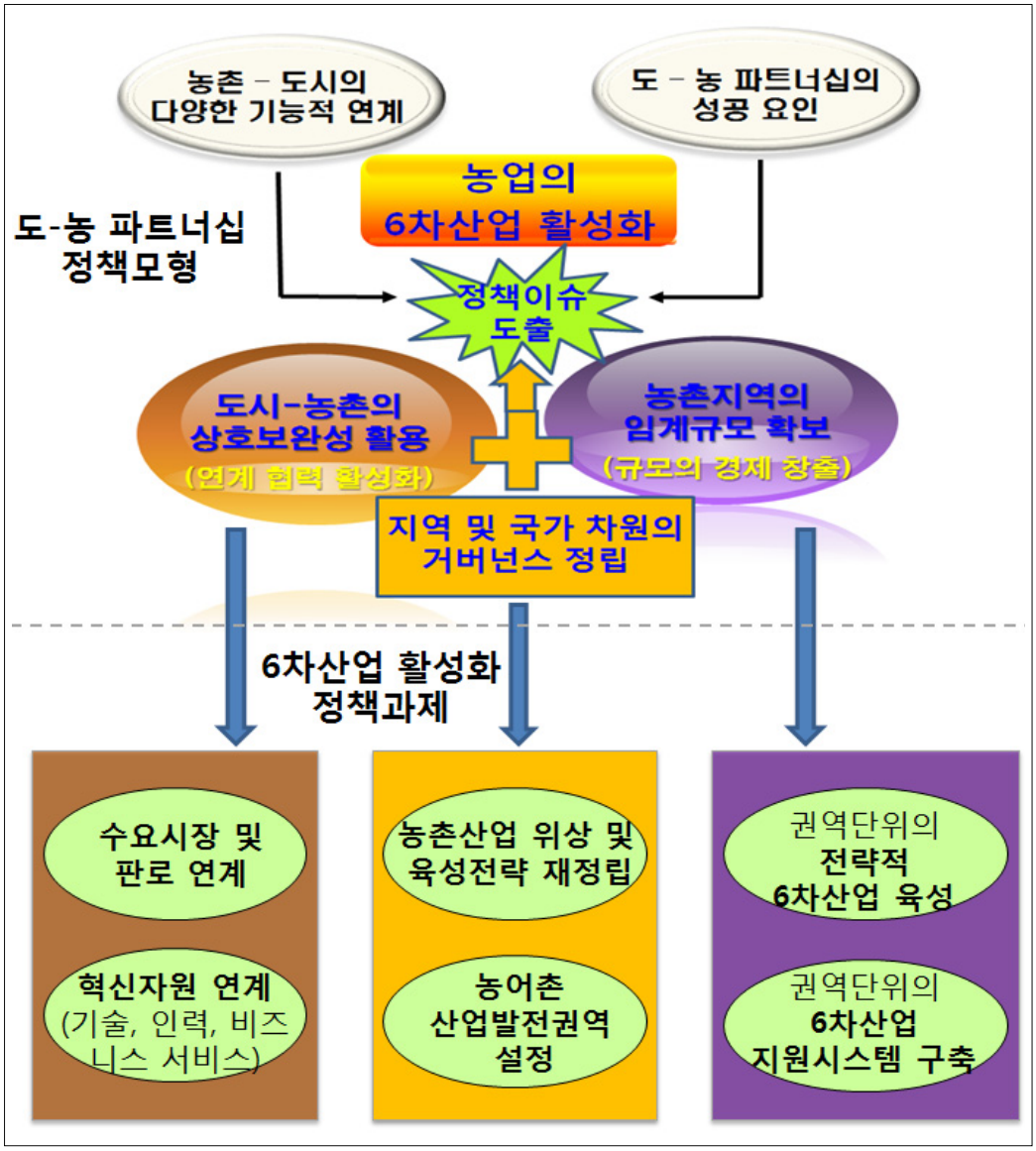
○ 동 절에서는 도·농 파트너십 정책모형을 토대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먼저 도·농 파트너십은 도시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역량의 상호보완성 활용과 농촌 산업 육성의 임계 규모 확보를 강조하는 전략이므로 도·농 파트너십의 5대 정책 이슈별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아가야 함.

○ 이와 함께 도·농 파트너십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촌 산업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소위 '농촌 산업 발전권' 설정을 통해 농촌 산업 육성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개별 품목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아래 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에서 소위 '전략적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

그림 5-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파트너십 정책모형과 정책과제 요약



자료: 저자 작성

○ 소위 '전략적 6차산업' 시범 사업은 '농촌 산업 발전권' 내에서 지역별로 기존 특화된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융복

합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함.

○ 그리고 ‘농촌 산업 발전권’ 단위에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것은 6차산업의 지원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구조적 복잡성을 해소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를 위함임.

3.1. 농촌 산업의 위상 정립 및 육성 전략 수립[13]

▌농어촌 산업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개방형 산업정책 패러다임과 장소 중심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농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산업의 육성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농촌 산업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이 요구됨.
- 농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원 및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농촌 산업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기존의 자원 및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공간적 연계 거점과 산업 부분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함.
- 도시 지역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농촌 산업의 거점 육성
- 전후방 연관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한 6차산업화 전략 도모

○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함.
- 도시 지역의 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13 동 절은 김선배·홍진기, 2010,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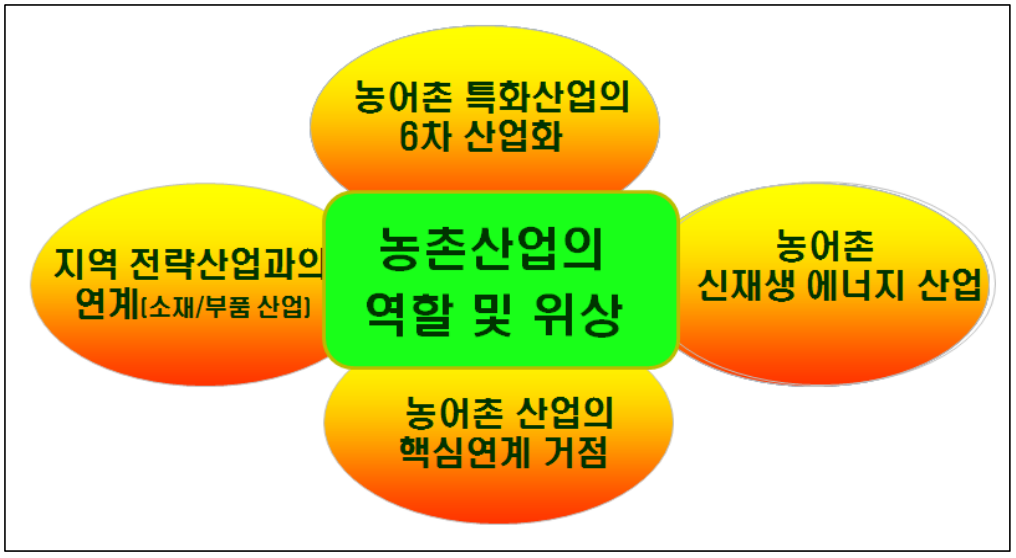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자원의 산업화 등을 도모

▌농촌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보유 자원 및 역량의 활용)

○ 농촌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혁신 역량을 토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강조하는 산업 발전 전략이 중요함.
- 농촌 지역의 규모, 지리적 입지 등 지역의 혁신역량과 보유 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가 필요
- 지역의 강점이 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성을 가지는 전후방 연관 산업을 연계 육성이 필요
-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한 비전의 공유, 보완 자산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

그림 5-2. 농어촌 산업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자료: 김선배·홍진기(2010).

▌도·농 파트너십(개방형 육성 전략)으로 농촌 지역의 경쟁력 제고

○ 농어촌 지역 산업육성정책에서 지적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중앙 주도의 소규모 분산·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임.

○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소위 '개별 클러스터별 일괄 패키지형 지원' 으로 대표되는 자체 완결형(폐쇄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에 있음.
- 동 전략은 일종의 초기 단계에서 클러스터 육성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일정 정도 유효하지만 사업의 중복·과잉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농어촌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적 지역경제 기반의 통합적 지역산업육성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산업 육성 전략을 자체 완결형(폐쇄형)에서 연계협력형(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함.
- 농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 서비스, 고급 인력과 기술 공급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농촌 지역 및 농촌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긴요함.

3.2. 농어촌산업발전권(가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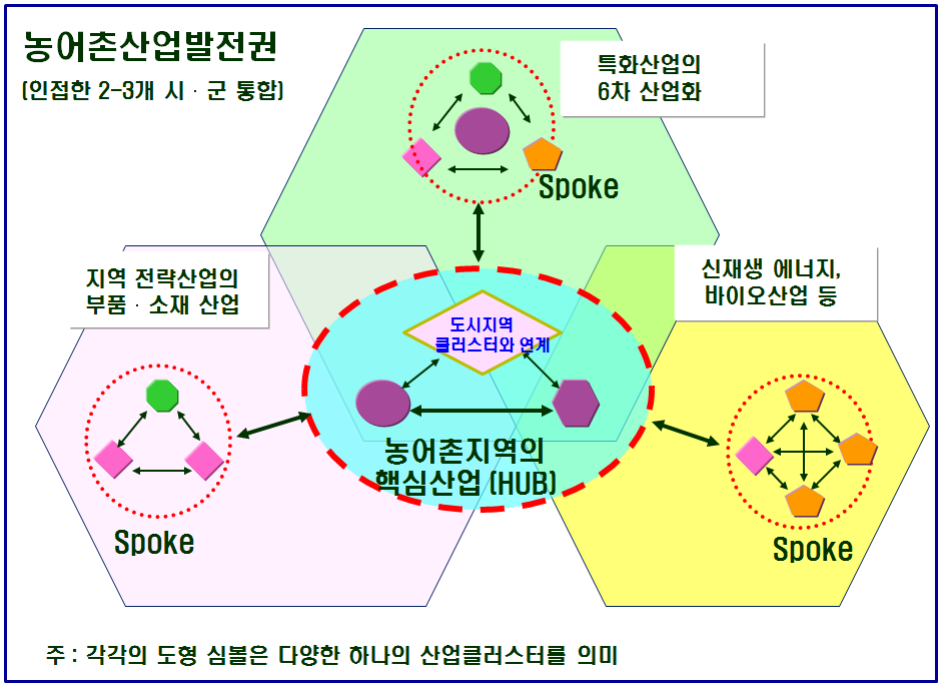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와 농촌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간의 연계 육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단일 시·군 단위 보다는 인접한 2~3개 시·군을 통합한 농어촌 산업 발전권(가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김선배·송우경, 2014).
- 농어촌 산업 발전권(가칭) 내에서 산업의 가치사슬과 전후방연관 구조에 기초하여 농어촌 산업과 지역전략 산업의 연계 육성을 도모함.
- 농어촌 산업 발전권(가칭)은 지역행복생활권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 보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범위가 약간 확대 가능함.

○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 산업육성(6차산업화 활성화)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와 도시 지역과의 시장 및 혁신자원 연계를 위해 규모의 경제 창출이 필요함.

○ 농어촌 산업 발전권 단위로 농어촌 산업을 4개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클러스터(시·도 전략산업 혹은 시·군 특화산업)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농어촌 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관 구조를 형성함.

○ 농어촌 산업 발전권의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지역 거점 단지와 특화산업 6차 산업화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지역전략의 부품·소재 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등 농어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확대해 나감.

그림 5-3. 농어촌 산업 육성 모델



자료: 김선배·송우경 외 (2014).

3.3. 농어촌 산업 발전권 단위의 ‘전략적 6차산업’ 시범 육성

○ 농촌 산업 발전권을 단위 지역으로 ‘전략적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가시적 성공 사례를 발굴함.

○ 현재 6차산업화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별품목을 단위로 생산성 제고(1차 산업), 가공 및 제조(2차 산업), 체험 관광 및 축제(3차 산업)를 상호 연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 전략은 지역 내 경쟁력이 있는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사업 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일반 품목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에는 제품 경쟁력 및 시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특정 개별품목 단위의 6차산업화는 지역 특화도, 시장 경쟁력, 사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가칭 ‘전략적 6차산업화’를 통해 특정 개별품목 단위의 6차산업화 전략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6차산업화 촉진 전략이 모색이 필요함.
- 가칭 ‘전략적 6차산업화’는 농어촌 산업 발전권 내의 지역별로 기존 특화된 1차, 2차, 3차 산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

○ 농어촌 산업 발전권 내의 특산물과 자원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위 ‘전략적 6차산업 육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
- 예를 들어 A(공주), B(논산), C(부여)와 같이 인접한 시·군이 통합 및 연계하여 동일 농어촌 산업 발전권(가칭)으로 설정된 경우
- 3개 시·군의 1차 산업(농산물 생산성 제고), 2차 산업(농산물 가공 및 제조), 3차 산업(체험관광, 축제,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을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화하는 ‘전략적 6차산업화’ 시범 사업 추진

3.4. 6차산업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전략 수립

○ 농어촌 지역 산업육성정책에서 지적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농촌 지역의 규모 경제 미확보와 중앙 주도의 소규모 분산·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임.

○ 농촌 지역에서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하기 위해 농어촌 산업 발전권을 단위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별 품목 단위의 효율적 6차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농 파트너십 전략(수요 시장 및 혁신자원 연계)을 활용한 6차산업 지원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도시 지역과 연계한 수요 시장 및 판로 확보
- 도시 지역의 혁신자원(기술개발 및 지원, 인력 교류 및 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연계 방안 마련

○ 농어촌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가공 및 생산, 판매, 특화산업의 체험관광 등 지역 특화산업의 가치사슬을 통합한 6차산업화 발전 모델이 긴요함.

○ 동 유형은 지역 고유산업, 향토산업,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 등에 특화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국지화 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다양성의 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에 부합되는 노동력 풀의 활용을 통해

실행에 의한 학습에 따른 특화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
- 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시 또는 중심 도시와 점진적으로 연계를 강화

○ 지역 특화산업의 6차산업화 모델, 공동 브랜드 모델(지역공동 브랜드, 유통기업 PB, 대기업 OEM 등) 등을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함.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성, 지역 고유 자원의 산업화 가능성, 기존 농업 클러스터,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함.

참고 문헌

김선배·송우경 외, 2014,「지역산업정책의 이론적 동향과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보고서.

김선배·홍진기·박도연, 2012,「클러스터 사업의 기업경쟁력 향상 메커니즘 및 인과성 분석: 경남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사례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선배·홍진기, 2010,「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용렬, 2015, '한국의 농촌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정책',『지역의 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자료집』,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외 2인, 2013,『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p.11.

농림축산식품부, 2013,『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p.19.

농림축산식품부, 2014,『6차산업화 지원정책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2015, 보도자료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는 6차산업화 본격 추진' 2015.1.26. 일자.

우장명, 2013,『6차산업화를 통한 충북 농업의 발전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최윤기·김선배 외 (2014)「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농업경제학회, 2014,『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Artmann, J. et. al.(2012), ***Partnership for sustainable rural-urban development: existing evidences***, OECD Publishing.

Foray, D. (2011) "Smart Specialization: the concept", Applied Policy ***Seminar, 4th session of the UNECE team o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Policies***, Palais des Nations, 12 May 2011.

OECD(2013), ***Innovation-driven Growth in Regions: The Role of Smart Specialisation***,

OECD Publishing.

OECD (2013), ***Rural-Urban Partnerships: An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OECD Publishing.

Montfort, A. and J. Hulst (2012), " Institutional features of inter-municipal co-operation:Co-operative arrangements and their national context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27, No. 2, pp.121-144